

2020년 11월 11일 제호
연구위원 김영준
연구위원 김유진
연구위원 안혜영
연구위원 오유진
연구위원 안완태
수석연구위원 황규환
수석연구위원 김동한
연구위원 김문석

11월간 산업 이슈(11월)

Monthly Industrial Issue

바이든 당선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경제 **美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방향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김영준**

- 바이든 행정부는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소득불평등 완화에 주력하면서 친환경 정책지원과 빅테크 기업 규제 등에 나설 전망이다. 통상정책의 경우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이어질 가능성
-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주요 산업 관련 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정책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력을 점검할 필요

업종별 주요 이슈

정유/화학 **바이든 당선에 따른 국내 정유/화학 산업의 득과 실** **안혜영**

- 전통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로 美 셰일 산업이 위축될 경우 아시아向 수출감소, NCC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에 긍정적. 다만 탄소 규제 강화 정책,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은 리스크 요인
- 바이든 당선으로 인해 국내 정유, 화학 산업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각 기업별로 사업구조, 환경 대응능력 등에 따라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와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철강 **자국 산업 보호 정책 유지, 친환경 정책 확대로 철강 수출 환경은 부정적** **김유진**

-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 블루칼라와 노동조합인 점을 고려할 때 자국 산업 우선주의 정책이 지속되면서 철강산업에 대해 현 수준의 무역규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 또한 환경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의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노동집약적이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산업은 잠재비용 상승(환경 관세 부과 등) 등의 부정적 영향 발생

반도체 **미중 양자택일 압력과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 증대 전망** **신석영**

- 바이든이 구상하는 다자주의 중심의 중국 견제 정책과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추진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전망이다
- 반면 친환경차 육성 정책은 이미지 센서와 차량용 반도체의 성장을 가속화 시켜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차전지 **바이든 당선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 영향** **오유진**

-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내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현지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수요 증가가 예상
- 미중 무역갈등 및 경제 민족주의 등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보다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추고 현지 완성차업체들과 협력관계가 잘 조성된 한국 기업들에게 더 큰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동차 **바이든 당선 이후 국내 자동차 산업 미래에 관한 고찰** **김동한**

- 바이든 당선 이후 對美 자동차 수출 장벽이 완화되고 친환경차 시장이 개화될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경쟁 심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상승 등은 부정적
-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환경변화는 위기와 기회라는 양면적 특성을 지니기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노력과 함께 기회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함

에너지 **바이든 당선에 따른 재생에너지 산업 영향** **오유진**

- 바이든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차세대 전력망 건설 및 클린에너지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
- 미국은 한국 태양광 기업들의 주력 시장으로 주택용 등 태양광 설치 수요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등의 긍정적 영향이 예상

건설 **해외 수주 스마트시티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황규완**

- 바이든 당선으로 유가의 제한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석유 수요 감소로 플랜트 중심의 수주구조를 가진 국내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해외 수주 확대가 여의치 않은 가운데 중동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스마트시티 시장 확대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보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바이든 당선에 따른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이 상존** **김문태**

-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는 면책 조항 폐지, 프라이버시 관리 강화, 법인세 인상, 반독점법 강화 등의 부정적 요인과 포용적 이민정책, 미중 갈등 완화, 망중립 회복 등의 긍정적 요인이 상존
- 가장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순이익 감소이며 반독점 규제 강화가 미국을 넘어 세계적 추세로 확산된다면 미국, 한국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활동을 제한할 전망

산업별 경기 트렌드

경기사이클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C10-11. 음식료품	음식료				●		
C13. 섬유	섬유		●				
C14. 의류	의류		●				
C19. 정유	정유	●					
C20-21. 화학제품	석유화학						●
	제약				●		
C22. 고무,플라스틱	고무,플라스틱	●					
C23. 비금속광물	시멘트						
C24. 1차 금속	철강			●			
	비철금속			●			
C26.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통신장비(휴대폰)			●			
C29. 기계	일반기계		●				
C30. 자동차	자동차		●				
C31. 가전·운송장비	조선		●				
D.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				●		
F. 건설	건설						●
G. 종합유통	무점포(온라인)			●			
	종합소매업(대형)		●				
	편의점		●				
H. 숙박 및 음식점	숙박(N/A)		●				
I. 운수	해상운송		●				
	항공운송	●					
J. 통신,미디어	통신서비스			●			
	SW/SI			●			
L. 부동산 및 임대	부동산						●

경제 이슈

美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방향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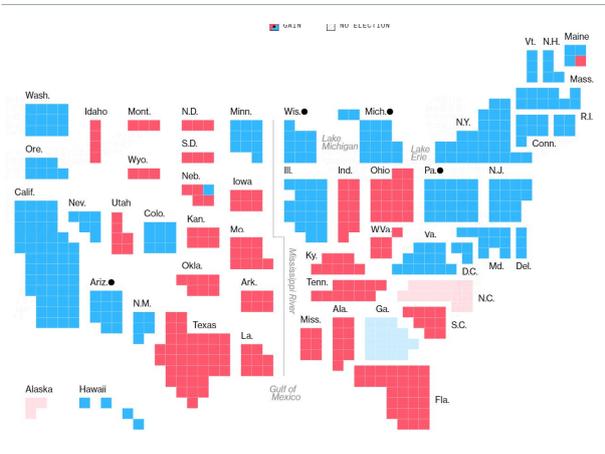
美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방향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 ※ **Summary** :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주요 정책의 변화가 예상. 큰 정부를 선호하는 민주당답게 바이든 행정부는 소득불평등 완화와 복지지출 확대 등에 주력할 전망. 특히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정책지원이 예상. 반면 통상정책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과의 무역갈등도 계속될 전망
- ※ **Comment** :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 주요 정책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긍정적 요인은 사업기회로,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로 대응할 필요

■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제46대 美 대통령에 당선

- 11월 3일 치러진 美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총선거인단 538명 중에서 과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제 46대 美 대통령에 당선
 -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선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진 의지를 밝혔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전망
- 반면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수 수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이 백악관과 국회 상하원을 동시에 휩쓰는 ‘Blue Wave’는 무산
 - 내년 1월 5일 치러질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공화당이 한 석이라도 차지하면 다수당 유지
- ‘Blue Wave’ 무산으로 대규모 재정부양이 어려워 졌지만, 연준의 추가 부양 가능성 기대, 증세 및 IT기업 규제 리스크 완화 등을 이유로 美 주식 및 채권시장이 동반 강세
 -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달러 약세는 제한

그림1 | 2020년 美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자료 : Bloomberg.com

표1 | 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자 주요 경력

출생	1942년 11월 20일(77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튼
1970.1~1973.1	미국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의회 의원
1973.1~2009.1	미국 델라웨어주 민주당 상원의원
1987.1~1995.1	미국 연방상원의회 법사위원회 위원장
2007.1~2009.1	미국 연방상원의회 국제마약통제위원회 위원장
2009.1~2017.1	미국 제47대 부통령
2020.11월	제 46대 대통령 당선

자료 : 나무위키

■ **바이든 행정부, 중세 및 복지확대와 기후변화 관련 파격적인 정책지원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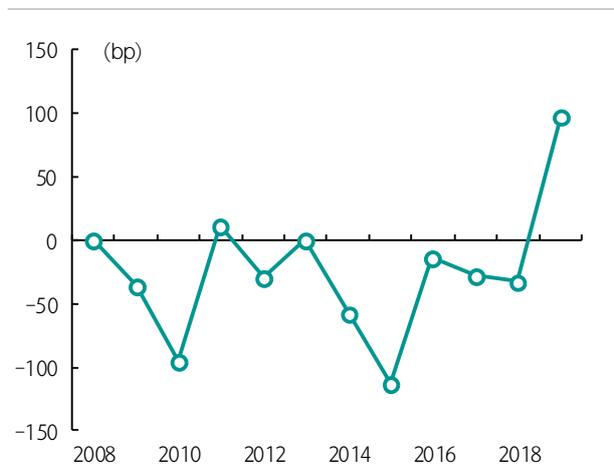
- 바이든 당선자는 대외정책으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동맹국과의 전통적 협력관계를 복원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고 이란 핵합의와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도 추진할 전망
- 경제정책으로는 트럼프의 감세 및 성장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법인세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와 교육·의료 등 복지지출 확대를 추진할 전망
 - 제조업 공급망 확충에 4년간 7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특히 5G, AI, 통신 플랫폼, 전기차 등 신산업·핵심기술의 R&D에 3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약
- 기업정책 중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거대 플랫폼의 구조적 분리 및 반독점법 강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한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폐지할 가능성도 제기
- 기후변화 위기를 부정했던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은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높아 관련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
 - 각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Zero)화,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 투입 등의 공약을 제시
- 반면 통상정책의 경우 미국내 생산 재건(Buy American, Make It In America)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계속될 전망이나 징벌적 관세정책에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

표2 | 美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

Year	Max Tax Rate	President	Comments
1970	53% → 49%	Nixon	Recession
1971	48%	Nixon	Recession
1979	46%	Carter	Offset high interest rates
1987	40%	Reagon	Tax Reform Act
1988	34%	Reagon	Recession
1993	35%	Clinton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2018	21%	Trump	Tax Act goes into effect

자료 : thebalance.com

그림2 | 美 Reshoring Index 추이



주 : 美 제조업 총산출 중 아시아 14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조업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MIR)의 변화로 계산하며 플러스는 리쇼어링 확대를 의미
 자료 : Kearney

■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주의할 필요

- 4년 만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주요 산업 관련 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불가피
- 전통 에너지를 중시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당선자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중시하므로 이와 관련된 기회가 예상
 -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정유 등은 부정적 영향이 큰 반면,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이차전지 등은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
- 5G, AI, 통신 플랫폼, 전기차 등 신산업·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는 IT 기업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지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부정적
 - 10월 미 하원은 구글, 애플 등을 독과점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반독점 규제를 제안
-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여러 산업에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동시에 가능. 정권 출범 이후 주요 정책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긍정적 요인은 사업기회로,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로 대응할 필요 

표3 | 바이든 당선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업종	영향	세부 내용
자동차/부품	긍정/부정	무역관련 불확실성 완화와 친환경차 시장확대는 자동차/부품 업체에 기회요인 반면 내연기관차 연비규제 등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상승 압력은 리스크 요인
반도체	긍정	바이든이 구상하는 중국 견제와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리스크 요인 반면 친환경차 육성은 이미지 센서 및 차량용 반도체 생산 확대를 야기할 전망
철강	부정	자국 산업 우선주의 정책 지속으로 현 수준의 무역규제가 유지될 전망. 특히 철강산업은 탄소배출량이 많아 환경 관세 부과 등 잠재비용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
정유/ 화학	긍정/부정	기존 전통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강화는 美 대비 국내의 경쟁력 상승을 야기할 수 있 으나, 탄소 규제 강화와 보호무역 움직임은 제품 수출에 부정적
신재생 에너지	긍정	바이든은 태양광, 풍력, ESS 설치확대 등으로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국내 태양광 기업의 매출 확대 등에 기여할 전망
이차전지	긍정	바이든의 친환경차 지원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 및 배터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은 미국내 수요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생산시설을 확충할 전망
건설	긍정	청정에너지 R&D 관련 대규모 투자 계획은 건설업에 긍정적. 특히 국내 업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스마트시티 등의 확대는 해외 수주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정보서비스	부정	면책 조항 폐지, 반독점법 강화 등은 디지털 플랫폼에게 부정적 요인이며,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업종별 주요 이슈

- 정유/화학 : 바이든 당선에 따른 국내 정유/화학 산업의 득과 실
- 철강 : 자국 산업 보호 정책 유지, 친환경 정책 확대로 철강 수출 환경은 부정적
- 반도체 : 미중 양자택일 압력과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 증대 전망
- 이차전지 : 바이든 당선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 영향
- 자동차 : 바이든 당선 이후 국내 자동차 산업 미래에 관한 고찰
- 에너지 : 바이든 당선에 따른 재생에너지 산업 영향
- 건설 : 해외 수주 스마트시티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 정보서비스 : 디지털 플랫폼, 바이든 당선에 따른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이 상존

C19-21 정유/화학 바이든 당선에 따른 국내 정유/화학 산업의 득과 실

※ **Summary** : 바이든 당선자는 기존 전통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美 셰일 가스 및 오일 산업이 위축될 전망이며, 이는 미국 석유관련 제품의 아시아向 수출감소, NCC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내 유관 산업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다만 바이든 당선자의 탄소 규제 강화 정책,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은 정유, 화학 제품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

※ **Comment** : 바이든 당선자의 에너지 정책은 국내 정유, 화학 산업 및 기업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줄 수 있으므로 각 기업별 사업구조와 환경대응 능력에 따른 차별화 된 리스크 관리가 필요

■ 바이든 당선자는 美 석유,가스, 석탄 등 전통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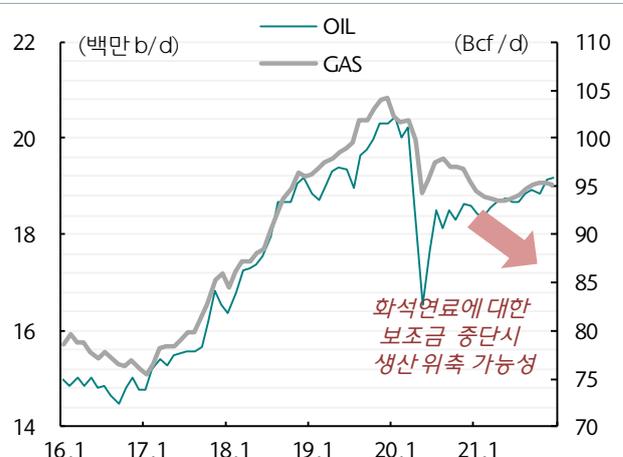
- 美 대선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 되면서 바이든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청정에너지에 대치되는 석유 및 가스 등 전통 화석연료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
-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공약으로 청정에너지분야에 2조 달러(약 2,232조원) 투입을 내세우면서 기존 전통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을 밝힘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0)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는 전력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인다는 계획
- 이를 위해 바이든은 전통 화석연료인 석유 및 가스 등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함께 美 토지 관리국 감독 지역에 대한 새로운 프래킹(fracking·수압파쇄법)¹⁾을 금지할 계획
 - Oil Change International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는 화석 연료 탐사 및 생산을 위해 직접 지원, 세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연간 200억 달러(약 22.3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해 옴

표4 | 화석연료에 대한 바이든의 입장

화석연료 규제	美 전통 에너지 산업 영향
화석연료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중단	- 저유가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미국 셰일 기업의 파산이 가속화 - 셰일 가스, 오일 생산 축소
미국 연방정부의 토지관리국 감독 지역 내 새로운 프래킹을 금지	- 연방 정부 감독 지역 내 가스 및 석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제한으로 신규 개발 축소 - 다만 그 외 지역의 경우 생산은 주에서 규제하므로 연방정부의 규제는 불가
2035년까지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 "0"화	- 미국 내 유류 발전 비중은 1% 미만으로 미미하여 영향 제한적 - 가스발전의 경우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 시 타격 불가피

자료 : 바이든 캠프 공약 정리

그림3 |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생산량 전망



자료 : 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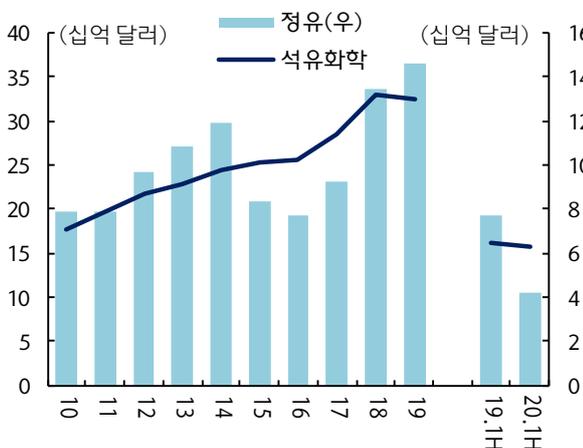
1) 프래킹은 퇴적암층에 화공약품을 투입해 고압 폭발시켜 셰일가스를 추출하는 기술로, 환경파괴 논란이 큼

- 에너지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이 같은 공약이 미국의 청정에너지원 육성을 가속화 할 수 있지만 기존 미국 전통 에너지 산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
 - 석유 및 가스 산업은 미국 전체 GDP의 약 8%에 달하며, 화석 연료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 전통 에너지 산업의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
 - ※ 바이든과 유사하게 강력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구했던 오바마 정권 당시 미국의 화석연료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
- 다만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저유가로 이미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미국 셰일 기업의 파산이 가속화 될 수 있으며, 신규 가스 및 석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가 제한될 것으로 보여 전통 에너지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
 - 바이든 당선자가 친환경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전통 에너지 산업에 환경규제를 강화 할 것으로 보여 환경규제 대응비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셰일오일 생산 축소는 아시아 지역 공급과잉 완화 및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정유/화학 산업에 긍정적 영향 기대

- 미국 셰일 등 에너지 기업들은 기존에 지급되던 보조금의 중단, 환경규제 대응 비용 상승으로 인해 성장성이 악화되고 이는 미국의 원유와 가스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게 될 전망
- 미국의 정권교체와 셰일 생산량 감소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획되었던 석유화학 설비 투자 계획의 상당 부분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아시아向 석유 제품 및 석유화학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시아 내 공급과잉은 완화될 전망
- 또한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9월말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의 20%)인 미국의 원유 생산이 감소한다면 국제 유가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저유가로 어려움 겪어왔던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 주요 품목의 가격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

그림4 | 미국의 정유, 화학 제품의 對아시아 수출 추이



자료 : Trade map

그림5 | 미국과 한국의 에틸렌 제조원가 및 가격 격차



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 Cischem

- 또한 셰일가스 생산 축소 시 미국 화학제품 원재료인 에탄가스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화학제품의 제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기대
 - 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유가 상승폭은 제한적
- **다만 바이든의 탄소 규제 강화(탄소조정세 부과),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 등은 국내 정유, 화학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바이든 당선자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s)²⁾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석유화학 수출에 직접,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
 - 전문가들은 탄소조정세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라고 분석
 - 우선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탄소조정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중국의 대미 완제품(국내 화학제품이 중간재로 이용되는)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화학제품 수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
 -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대중 수출이 약 20% 감소
 - 국내 정유/화학 산업 역시 탄소배출량이 많은 편으로, 미국이 국내 제품에 탄소조정세를 부과할 경우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비용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
- **국내 정유/화학산업에 바이든 당선자의 에너지 정책은 득(得)과 실(失)이 공존하므로 기업별로 차별화된 리스크관리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 美 셰일 등 전통에너지 산업 위축은 아시아 수출 감소에 따른 역내 공급과잉 완화, NCC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예상
 - 특히 미국과 수출시장에서 경합도가 높은 에틸렌계열 제품 비중이 높은 기업의 수혜 예상
 - ※ 롯데케미칼의 미국 법인(LC USA)은 에탄 기반 설비로 실적 악화 우려 상승
 - 다만 바이든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국에도 환경규제를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탄소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정유, 화학산업은 기업별 환경규제 대응 능력에 따라 부정적 영향 차이를 보일 전망
 - 이와 같이 바이든 당선으로 인해 국내 정유, 화학 산업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각 기업별로 차별화 된 리스크 관리와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2) 바이든은 미국에서에서 오염물질 배출 기업이 오염의 전체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를 취함에 따라, 기후와 환경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의 탄소 집약적 상품에는 탄소조정세 또는 쿼터(quota·수입 물량 제한)를 부과하겠다는 입장

C24. 철강 : 자국 산업 보호 정책 유지, 친환경 정책 확대로 철강 수출 환경 부정적

※ **Summary** : 향후 자국 산업 우선주의(Buy America) 정책이 지속되면서 현 수준의 무역규제가 유지될 전망.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 블루칼라와 노동조합인 점을 고려할 때 러스트 벨트를 보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또한 환경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의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노동집약적이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산업은 잠재비용 상승으로 부정적인 영업환경에 노출될 가능성 상존

※ **Comment** : 향후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하면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화석 에너지 생산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유정용 강관 수출이 감소할 수 있어 관련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향후 Buy America 기조가 유지되면서 철강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무역규제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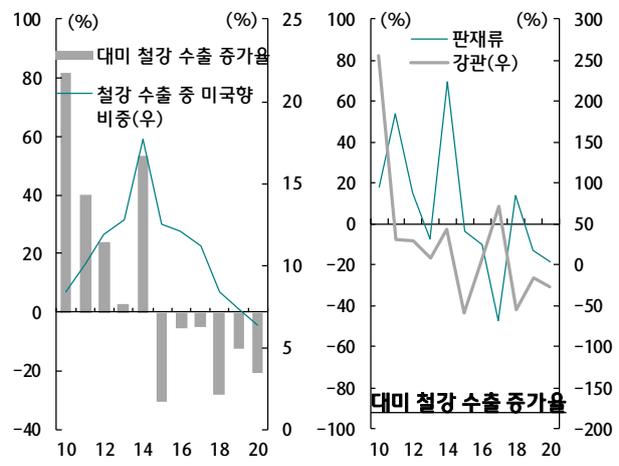
-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의 자국 산업 우선주의(Buy America) 기조를 유지하면서 철강산업에 대해 현 수준의 무역규제를 지속할 전망
- 블루칼라와 노동조합이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철강 등의 제조공장이 집중된 러스트 벨트를 보호할 가능성 높기 때문
 - 美 철강기업 노동조합인 전미철강노조는 미국에서 조강 공정을 거친 철강제품 60% 이상을 사용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미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요구
- 트럼프는 2018년 초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했는데, 한국은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 톤)의 70%로 수출을 제한하는 쿼터(수입할당제)를 수용
 - '20년 10월 기준 한국산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무역 규제 중 미국이 전체의 28.5%를 차지하며 1위

표5 | 한국산 철강·금속 제품에 대한 무역 규제 국가 순위

	국가	규제 수(건)	비중(%)
1	미국	37	28.5
2	태국	13	10.0
3	캐나다	12	9.2
4	인도	12	9.2
5	호주	10	7.7
6	남아프리카공화국	6	4.6
7	인도네시아	5	3.8
8	말레이시아	5	3.8
9	EU	4	3.1
10	멕시코	3	2.3
	기타	23	17.7
	전체	130	100

주 : 2020년은 9월 누계 기준
자료 : 한국철강협회

그림6 |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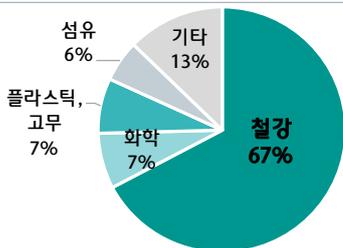


- 2018년 쿼터제 시행 이후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이 급감하면서 철강 수출 중 미국 비중이 줄었고 특히 강관 수출은 절반 이상 감소하였는데, 향후 바이든 정권에서도 수출시장의 회복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대미 철강 수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강관 수출량이 2017년 약 2백만 톤에서 2019년 76만 톤으로 60% 이상 감소하였고, 2020년 9월 누계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27.2% 감소

■ 바이든의 환경·노동 가치 중시 정책은 노동집약적이고 환경오염 산업인 철강에 부담으로 작용

- 환경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의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노동집약적이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산업은 잠재비용 상승(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환경 관세 부과 등)으로 부정적인 영업환경에 노출될 전망
 -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관련 주요 공약은 전력부문 탄소배출 2035년 제로, 전기 충전소 5만개 확충,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
- 특히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화석 에너지 사용 및 생산을 제한한다면 유정용 강관 수요(수출) 감소가 불가피
 - 트럼프 정권에서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 정책 하에 미국 셰일가스 개발업체의 도산을 막기 위해 지원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용 강관 수요를 지지
- 최근 무역규제 및 유가 하락으로 유정용 강관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 강관사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노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소수 기업에 한정되며 여전히 화석 에너지에 대한 수요 의존도가 높은 편
 - 국내 1위 강관업체 세아제강은 해상 풍력발전 시장을 타깃으로 관련 제품(후육관 등) 생산 투자 

그림 7 |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규제 현황('20년)



품목	내용
페로바나듐	반덤핑 재심 최종판정(7.2)
강벽사각파이프	반덤핑 재심 최종판정(7.6)
냉간압연강판	반덤핑 재심 최종판정(7.6)
탄소합금후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재심 예비판정(7.2)
탄소합금강선재	반덤핑 예비판정(8.3)
대형구경강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재심 최종판정(8.13)
무계목강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산업피해 예비판정(8.21)
열연강판	상계관세 재심 최종판정(9.28)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 8 | 해상풍력 구조물의 소재로 사용되는 후육관



자료 : 세아제강

C26. 반도체 : 미중 양자택일 압력과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 증대 전망

※ **Summary** :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바이든의 정책은 ‘미국의 다자주의 중심 중국 견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친환경 전기차 육성’임. 이 중 앞선 두 가지 정책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며, 전기차 육성은 이미지센서와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호재로 다가올 전망

※ **Comment** : 바이든 시대의 반도체 산업은 트럼프 시대보다 높은 불확실성으로 요약되며, 하나의 이슈에 대해 상품 또는 기업 별 핵심 시장에 초점을 두고 반도체 이슈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 바이든 시대 개막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보다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전망

-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이든의 정책은 크게 “다자주의 중심의 중국 견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친환경 전기차 육성”으로 요약됨
- 이 중 다자주의 중심의 중국 견제와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전망
- 반면 친환경 전기차 육성은 이미지센서와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호재로 다가올 전망

표6 |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관련 정책

정책	내용	한국 반도체 산업 영향
다자주의 중심의 중국 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의 양자주의식 중국 견제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에 바탕을 둔 다자주의식 중국 견제로 전환 - TPP 방식의 다자주의 무역 협정과 WTO를 앞세워 중국을 폭넓게 견제할 가능성이 대두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무역 협정에 가입해야 하는 압박이 거세질 전망 -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이며, 한국 반도체의 중화권 수출 비중이 61%에 달하는 등 양자택일 에 따른 국내 기업의 중국 수출 타격이 불가피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 코로나 충격으로 반도체 공급망이 변화하고 반도체 산업의 분업화가 고도화 되면서 반도체 공급망에 관심 대두 - 미국 상·하원이 발의한 반도체 생산 인센티브 법안 등을 통해 미국 중심의 ‘신리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강조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신규 투자 압력 가중 - 한편 해외 반도체 기업이 미국 투자 시 투자세액을 감면해주는 등 미국으로의 생산이전 인센티브가 있어 국내기업들의 비용 절감 기회가 될 수도 있음
전기차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 차량 300만대 및 스쿨버스 50만대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 - 친환경 자동차 산업서 100만개 일자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이미지센서 및 차량용 반도체 수혜 전망

자료 : 언론자료 종합,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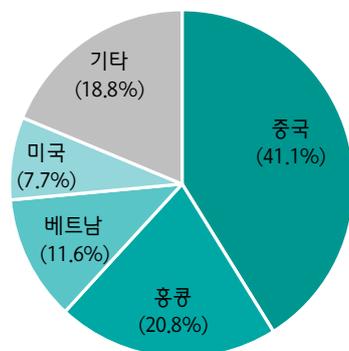
■ 다자주의 중심의 중국 견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양자택일 압력으로 다가올 전망

- 바이든은 '20년 2월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에 대해 분명한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취임 이후에도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
 - 다만 바이든은 트럼프식 관세나 보복에 기초한 일대일 중국 견제는 자국 내 피해가 크고 큰 실효성이 없어, 동맹국과의 연대 기반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TPP 방식의 다자주의 협정을 동맹국과 체결하고 WTO를 앞세워 중국을 폭 넓게 규제할 가능성이 높음
 - 바이든이 부통령을 지내던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국은 대중 견제의 일환으로 환태평양경제 동반자 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를 구축했으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TPP를 탈퇴, 현재는 호주와 일본 주도하에 CPTPP로 변경되어 운영 중
- 한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중국 제재의 핵심 동맹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이 중국 제재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 '20년 7월 기준 한국 반도체 수출의 중화권(중국+홍콩) 비중은 61.9%

■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역시 국내 반도체 기업의 리스크 요소로 부상

-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정의하고 중국의 첨단 산업을 꺾을 핵심카드로 인식하고 있으나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은 취약
 - 미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이 전세계 48%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 내 제조 능력은 12%에 불과하여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방안이 미국 내부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음
- 반도체 공급망 강화의 방안으로 올 6월 미국 상·하원에서 반도체 인센티브 법안 (CHIPS: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이 발의되었음
-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시 국내 기업의 신규 투자 부담이 가중 전망

그림9 | 한국 반도체 산업의 주요 수출 시장 ('20.07)



자료 : 한국 무역협회

표7 | 미국의 반도체 생산 경쟁력 강화 법안

정책	내용
CHI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및 해외 반도체 기업이 미국 투자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100억\$) - 24년까지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 지출에 40% 세금 공제
파운드리 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생산 R&D 사업 자금 지원 (200억\$) - 중국 정부와 관련된 기업은 해당 법안의 예산 지원 배제

자료 : The H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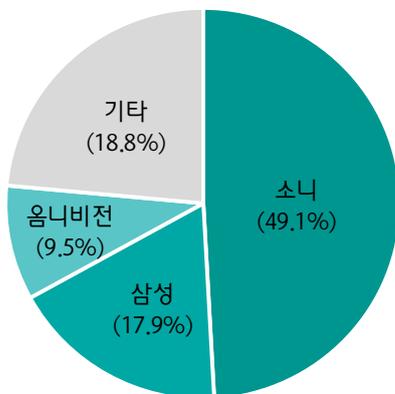
■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육성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 호재로 다가올 전망**

- 바이든은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그린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중 전기차 육성에 대한 내용이 핵심으로 포함되어 있음
 - 50만개 이상의 신규 공공 충전소 설치, 연방정부 차량 300만대와 스쿨버스 50만대를 전기 차로 교체 지원 등
-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이미지센서와 차량용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어 바이든의 그린 뉴딜 정책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호재가 될 전망
 -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파운드리, 이미지센서, 차량용 반도체 1위를 목표로 133조원 투자

■ **상품 또는 기업 관점에서 반도체 이슈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

- 바이든 시대의 개막으로 반도체 산업은 트럼프 시대 보다 불확실성이 증대될 전망
 - 기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요소였던 미중 갈등은 동맹주의 전환으로 더욱 심화될 예정
 - 반면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더해져 트럼프 시기보다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짐
- 따라서 하나의 이슈가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시 긍정/부정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산업 단위가 아닌 상품 또는 기업 단위의 분석이 중요해짐
 - 특히 기업이 주력하는 반도체 상품이나 기업 별 핵심 수출 시장에 초점을 두고 반도체 이슈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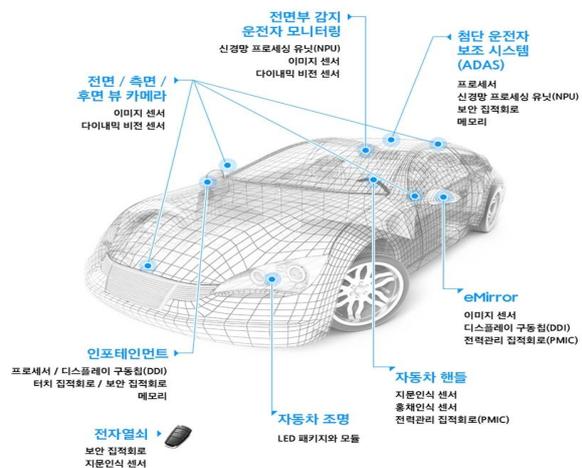
그림10 | 기업별 이미지센서 시장 점유율 ('19)



자료 : TSR

그림11 | 차량용 반도체와 전기차

삼성의 자동차용 반도체 솔루션



자료 : 삼성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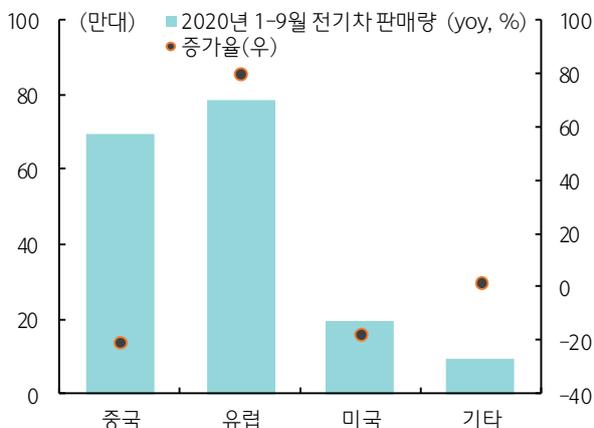
C.28 이차전지 : 바이든 당선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 영향

- ※ **Summary** : 미국은 글로벌 자동차 TOP3 시장 중 하나지만, 전기차 판매는 중국, 유럽보다 부진한 편.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이 친환경차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미국 내 전기차 시장 확대 및 현지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수요 증가가 예상. 바이든은 제조업의 'Made in All of America'를 추구하고 있어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에게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
- ※ **Comment** : 미중 무역갈등 및 경제 민족주의 등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보다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추고 현지 완성차업체들과 협력관계가 잘 조성된 한국 기업들에게 더 큰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내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현지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수요 증가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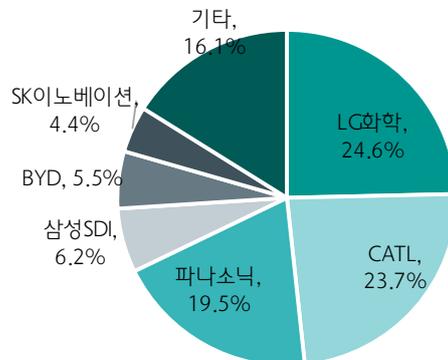
- 미국은 글로벌 자동차 TOP 3 시장 중 하나지만, 전기차 판매는 중국, 유럽보다 부진한 편이며, 2020년 1~9월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19.5만대로 전년동기대비 18%가 감소
 - 중국과 유럽의 2020년 상반기 EV 시장 침투율이 3~6%에 달하는 반면 미국은 1% 초반에 불과
-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이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을 펼치며 그간 위축되었던 미국 전기차 시장은 2021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
- '20년 상반기 테슬라의 美 전기차 점유율이 82%에 이르는 등 압도적 영향력을 보이는 가운데 GM, 포드 등 여타 자동차 OEM들도 전기차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1~9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35%에 달하는 국내 이차전지 기업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

그림12 | 국가별 전기차 판매 동향



주 : BEV+PHEV 합산 기준
자료 : SNE research

그림13 | 2020년 1-9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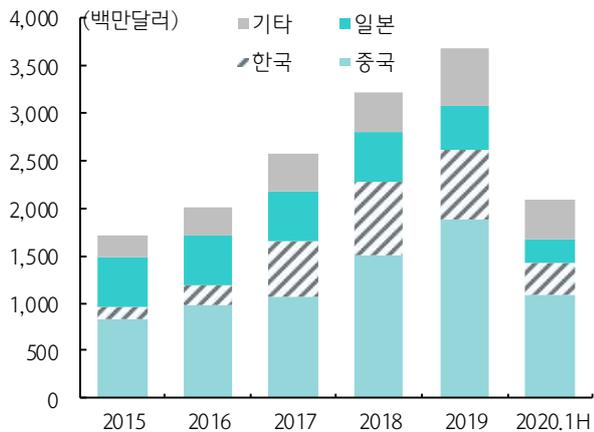


자료 : SNE research

■ 미·중 무역갈등 및 경제 민족주의 등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보다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 기업들에게 더 큰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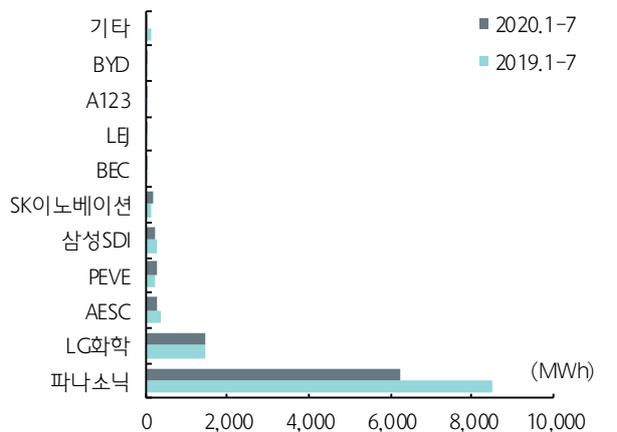
- 바이든 당선자는 제조업의 'Made in All of America'를 중심 가치로 두고 있어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에게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
- 현재 미국 내 배터리 1위인 파나소닉은 테슬라에게 공급이 집중되어 있고, 중국 CATL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 내수시장 및 유럽시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GM, 포드 등 여러 자동차 OEM들과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미국 내 배터리 생산시설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에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LG화학은 미국 배터리 생산시설 추가 투자여부를 검토 중이며, 삼성SDI도 제 2의 테슬라 불리는 전기차업체 리비안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미국시장 입지 확대
- 다만, LG화학-SK이노베이션의 특허 소송, 테슬라의 배터리 자체 생산 추진 등은 리스크 요인 

그림14 | 미국의 리튬이차전지 수입 동향



주 : HS코드 850760기준
자료 : Trademap

그림15 | 업체별 북미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자료 : SNE research

표9 | 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미국 진출 현황

기업	내용
LG화학	-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시에 5GWh 배터리 생산시설 보유(2012~) - GM과 합작법인 설립('19.12, 얼티엄 셀즈) 및 2.7조원 투자하여 30GWh 규모로 미국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에 생산시설 건설 중이며 2022년부터 가동 예정 → GM에 공급할 배터리는 5개 모델로 캐딜락, 쉐보레, GMC 브랜드 SUV, 픽업트럭에 우선 채용 예정 - 미국 내 수주 물량을 맞추기 위해 테네시주 등에 제 2 배터리 공장 건설 검토중
SK이노베이션	- 포드/폭스바겐 공급을 위해 미국 조지아주에 3조원을 투자하여 1.2공장(연산 21.5GWh) 건설중이며, 2023년 본격 가동 예정
삼성SDI	- 미국 내 셀 생산시설은 없음. 2015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슈타이어의 전기차용 배터리팩 사업 부문을 인수한바 있으며, 2018년 약 700억원을 투자해 기존 배터리 팩 공장을 증설

자료 : 언론보도

C30. 자동차 : 바이든 당선 이후 국내 자동차 산업 미래에 관한 고찰

※ **Summary** : 바이든 당선 이후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봄. 기회요인의 경우 자동차 수출 장벽이 완화되고, 친환경차 시장이 개화될 전망. 한편, 위협요인은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살펴봤는데 우선 외부요인에는 친환경차 경쟁심화,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비용상승 압력이 예상. 내부요인에는 품질 리스크, 노조 리스크가 이슈로 부상할 전망.

※ **Comment** :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환경변화는 위기와 기회라는 양면적 특성을 지님.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노력과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

1. 기회요인

■ (자동차 수출 장벽 완화) 조 바이든 집권 이후 미중 무역 갈등은 지속되겠지만,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은 감소하고,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 장벽은 완화될 전망

- 미국 우선주의를 고수했던 트럼프와 달리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를 옹호하는 바이든은 자동차 관세 부과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지는 않을 전망
 -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유럽과 멕시코 등을 겨냥한 자동차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된다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자동차 업계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됨
- 바이든 집권하에서도 미중 간 무역 갈등은 계속되겠지만, 트럼프와 달리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장벽도 완화될 전망

표8 | 미국이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예상 손실액

(단위 : 억원)

구분	영향요인	번호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	계
자동차	미국 수출	소비자 비용 ①	6,385	5,225	2,160	0	2,494	16,263
		기업 비용 ②	4,257	3,483	1,440	0	1,662	10,842
		계 (③=①+②)	10,642	8,708	3,600	0	4,156	27,105
	국내 공장	④	2,128					2,128
	멕시코 공장	⑤		562				562
	계 (⑥=②+④+⑤)	⑥	6,385	4,045	1,440	0	1,662	13,533
자동차부품	미국 공장	⑦	8,369	7,058				15,427
	계 (⑧=⑦)	⑧	8,369	7,058				15,427
총계 (⑨=⑥+⑧)		⑨	14,754	11,104	1,440	0	1,662	28,960
2019년 각사 당기순이익 (개별 기준)			28,323	15,829	-3,202	1,618	-3,410	.

자료 : 김동한(2018), "미국발 자동차 관세 전쟁 우려 고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Kis-Value

- (친환경차 시장의 개화) 바이든의 친환경차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 결정으로 중국과 유럽에 뒤쳐졌던 미국의 친환경차 시장 규모는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바이든은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을 검토 중이고, 2050년 탄소 제로(0)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
 - ※ 4년 동안 2조 달러(약 2,250조원)를 친환경 에너지 및 인프라에 투자할 예정
 - 우선,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미국에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를 도입하고, 5년 내 50만대 스쿨버스, 3백만대 연방정부 차량을 탄소배출 제로 차량으로 대체할 계획
 - 또한 50만개 이상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중고차 교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탄소배출 제로 차량 구매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
 - 이에 중국, 유럽 시장에 비해 뒤쳐졌던 미국의 전기차/수소차 판매가 고속 성장세로 전환하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2. 위협요인

가. 외부요인

- (경쟁 심화) GM, 폭스바겐, 테슬라, 토요타 등도 조만간 향후 도래할 친환경차 시대에 대해 경쟁력을 제고 하고 있어 친환경차 주도권을 잡기위한 경쟁은 더욱더 심화될 전망
 - (GM)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BEV3)을 바탕으로 SUV/픽업트럭 라인업을 출시할 예정이며, LG화학과 합자회사인 얼티엄 셀즈로부터 얼티엄 배터리를 공급받는 중
 - 2023년까지 신형 전기차 20종을 출시할 계획이고, 2025년 연간 100만대 판매가 목표

표9 | 파리 기후 협약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협약 채택	2015년 12월 12일
발효일	2016년 11월 4일
참여국	초기 195개국 (2020년 11월 4일 미국의 공식 탈퇴)
목적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이내로 유지
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각국의 자발적 목표 인정하지만,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표 제출

자료 : 한국경제, 언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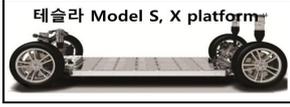
표10 | 바이든의 기후위기 대응정책 중 “교통” 부문

번호	주요 내용
1	캘리포니아식 강력한 자동차 연비규제 시스템 도입
2	5년 내 50만대의 스쿨버스, 3백만대의 공공차량을 탄소배출 제로 차량으로 대체
3	50만개 이상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 설치
4	중고차 교환 프로그램 도입해 탄소배출 제로 차량 구매시 인센티브 지급
5	탄소배출 차 생산업체들의 신설과 (구)공장의 전환에 보조금과 국가보증 용자 등 자금지원
6	공공교통의 탄소배출 제로 운송 수단 도입의 확대
7	항구의 탄소배출 저감 위한 투자, 그리고 철도 부문도 고속철 확대 등 공기오염 저감 노력

자료 : 로이터, 유진투자증권

- (VW) 독자적인 전기차 플랫폼(MEB)을 토대로 브랜드별 차별화된 전기차 전략을 선택했으며, 배터리 생산 투자에 나서는 등 배터리 기술 내재화를 모색
 - 2025년까지 총 80종(BEV 50종, PHEV 30종)의 전기차 출시, 연간 150만대 판매가 목표
- (테슬라)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순위 1위이자, 순수 전기차(BEV) 메이커로 독자 플랫폼을 토대로 대량 생산을 지향하며, 세단/SUV/픽업트럭/상용트럭 등을 공략할 예정이며, 배터리 조달처 다변화 전략과 함께 배터리 기술 내재화 전략도 병행
 - 2020년 연 50만대에서 2021년 연 100만대 이상 판매할 계획이고, 2025년 연간 500만대 이상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
- (토요타) 독자 플랫폼(e-TNGA)을 토대로 모든 친환경차(BEV/PHEV/HEV/FCEV)를 출시할 계획이며, 배터리 조달은 파나소닉, 도시바, CATL, BYD 등과 협력을 시작
 - 2025년 전동화 차량 550만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중 하이브리드카 450만대, BEV/PHEV/FCEV 100만대가 될 예정
- (현대차) 친환경차 종합 세트 전략을 구사 중이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 도입을 통한 범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배터리 조달처 다변화도 모색 중
 - 2025년까지 친환경차 44종(23종을 전기차 전용 모델로 출시)을 운영하고 100만대 이상 (현대차는 2025년까지 56만대, 기아차는 2026년까지 50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

표11 | 완성차 메이커별 전기차 전략 비교

전략 완성차	선택과 집중 vs 사업 다각화 (친환경차 라인업)	범용성과 경제성 (전기차 전용 플랫폼)	공급망 안정성 (전기차 배터리 수급)
 GM	선택과 집중 (중/미, SUV/픽업) HEV PHEV BEV PHEV BEV	 GM BEV3	파우치 : LG화학
 폭스 바겐	선택과 집중 (EU/중, 브랜드별 차별화) HEV PHEV BEV PHEV BEV	 폭스 바겐 MEB	파우치 :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각형 : CATL
 테슬라	선택과 집중 (전세계, 모든 차종) BEV	 테슬라 Model S, X platform	원통형 : 파나소닉, LG화학 각형 : CATL ※ 배터리 내재화 준비
 토요타	사업 다각화(전세계, 모든 차종) HEV FCEV HEV PHEV BEV FCEV	 토요타 e-TNGA platform	각형 : 파나소닉, CATL, BYD
 HYUNDAI	사업 다각화(전세계, 모든 차종) HEV FCEV PHEV BEV FCEV	 현대차 E-GMP	파우치 :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각형 : 삼성SDI (예상)

주 : HEV, PHEV, BEV, FCEV는 각각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순수 전기차, 수소 전기차를 지칭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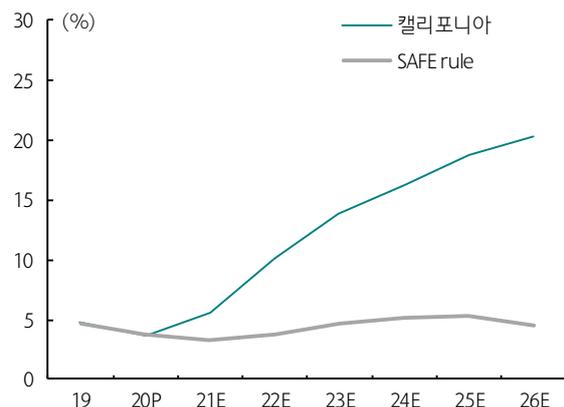
- 이처럼 GM, 폭스바겐, 테슬라, 토요타 등이 앞으로 도래할 친환경차 주도권을 잡기위한 경쟁력을 제고 하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환경규제 강화) 내연기관차 연비규제 강화, 탄소국경세 부과 등 강력한 환경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비용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일이 전염병에 대응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³⁾ 도입, 탄소국경세⁴⁾ 부과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완성차 메이커들은 비용 상승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톤(t)당 7만 6,000원의 탄소국경세 법안을 도입할 계획
 - 이에 폭스바겐은 미국 테네시주에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있고, GM과 포드 등도 미국의 유연한 노동 시장 구조 하에 발 빠른 전기차 전환을 모색 중
 - 폭스바겐은 미국 현지에서 2022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차가 체코 현지 법인에 코나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 보유 외에는 해외 지역에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이 있거나 향후 확대 플랜이 없는 상황

표12 | 완성차 메이커별 전기차 판매 계획

완성차 메이커	전기차 판매 목표
GM	연 100만대(2025년)
폭스바겐 (단일 브랜드 기준)	연 150만대(2025년), 누적 2,800만대(2028년)
테슬라	연 50만대(2020년), 연 100만대(2021년), 연 500만대(2025년)
토요타	연 100만대(2025년)
현대/기아차	연 100만대(2025년)

자료 : 언론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16 | 트럼프 정부와 캘리포니아 규제의 전기차 비중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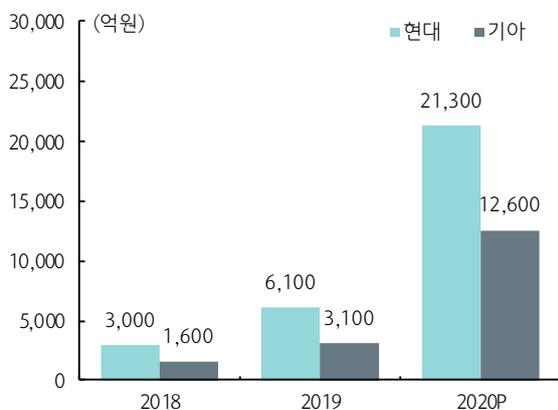
주 : 트럼프 정부는 약화된 연비규제인 SAFE rule을 선호
 자료 : BNEF, 유진투자증권

3) 2020년 9월 美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35년까지 가솔린/디젤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번 조치는 신차 판매에만 적용되고, 2035년 이후에도 주민들은 내연기관차를 보유하거나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됨
 4) 현재, 탄소국경세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2019년 12월 11일 신EU 집행위가 마련한 유럽그린딜 전략 중 하나 (김도연(2020), "EU, 탄소 국경세 도입 추진에 따르는 영향은?", kotra 해외시장뉴스)

나. 내부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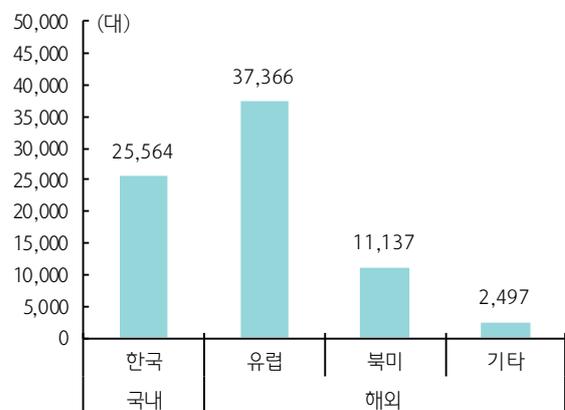
- (품질 리스크) 최근 세타2 엔진에 따른 리콜비용을 대부분 반영했지만, 잇따라 화재 발생으로 논란이 된 코나 전기차에 대한 리콜 시작 등 품질 리스크가 지속
 - 2015년 초 세타2 GDi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주행 중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결국 세타2 GDi 엔진의 결함이 확인
 - 2020년 10월 미국에서는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세타2 GDi 엔진이 탑재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Knock Sensor Detection System) 적용을 확대하고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함
 - 발표 당시 보증 대상 차량은 미국 417만대, 국내 52만대 등 모두 469만대로, 평생 보증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충당금을 더 쌓을 수밖에 없었음
 - 그리고 2020년 3분기 현대/기아는 세타2 GDi엔진 관련 품질 비용으로 총 3조 4천억원의 충당금을 실적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현대차는 3분기 영업손실 3,138억원을 기록
 - 현대/기아 각각 2조 1천억원, 1조 3천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실적에 각각 반영
 - 더욱이 최근 코나 전기차 모델('17.9.29~'20.3.13 간 제작된 모델) 관련 배터리 폭발/화재 이슈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전량 리콜 처리를 한다면, 약 1조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예상
 - 금년 10.16일부터 현대차는 코나 전기차 내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배터리 검사 기능을 갖춘 뒤, 배터리에 이상이 있으면 교환해주는 방식의 리콜을 시작

그림17 | 현대/기아차의 세타2 GDi엔진 결함 리콜 품질 비용



주 : 세타2 엔진 결함 리콜 품질 비용을 매년 3/4분기 실적에 반영
 자료 : 매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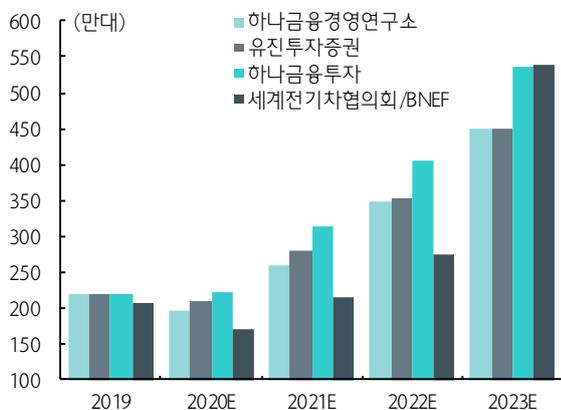
그림18 |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 리콜 대상 차량



주 : 2020년 10월 검색 기준
 자료 : 언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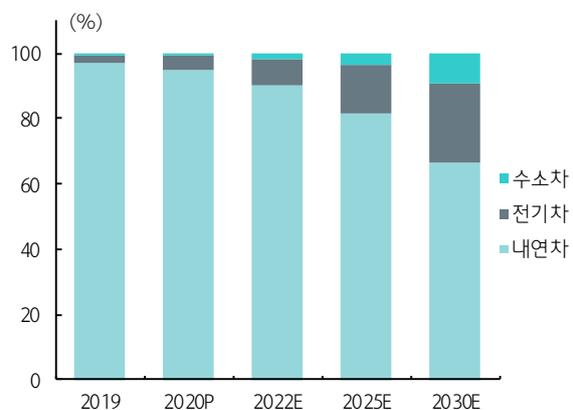
-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더욱 더 엄격한 안전성이 요구되는데, 세타2 GD이엔진과 코나 전기차 사태처럼 품질 리스크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친환경차 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노사 관계 문제) 미국發 친환경차 시대가 도래하면, 장기적으로 국내 노사 관계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결정 요인으로 노동유연성과 인건비가 중요해졌는데, 이들 두 요인은 노사 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됐음
 - 바이든 당선을 계기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변모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노동 시장도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 정부는 2030년 친환경차가 국내 연간 신차 비중의 33%(연 45만대 규모)로 예상
 - 특히 전기차에는 엔진, 변속기 등이 필요 없으며, 1대의 자동차를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부품의 수도 기존 3만 여개에서 1만 8,900 여개로 감소할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 이에 바이든 집권을 촉매로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이 급성장하게 된다면, 과거와 달리 자동차 업종에서 대규모의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됨
 - 엔진부품, 구동·전달 및 제동장치 부품, 전장품·전자부품 부분의 인력 구조가 변화할 전망
 - 노사가 글로벌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생존력이 한층 더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그림19 |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전망



자료 : 세계전기차협회 외 여러 기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20 | 한국의 신차 판매 비중 전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D. 에너지 : 바이든 당선에 따른 재생에너지 산업 영향

※ **Summary** : 바이든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할 계획. 현재 미국 최대 발전원은 천연가스이며, 석탄은 경쟁력 상실로 쇠퇴중이고, 태양광·풍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탈탄소화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태양광·풍력·ESS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천연가스는 일정 비중이 유지될 전망

※ **Comment** : 바이든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미국 내 주택용 태양광 설치 규모가 현재보다 2~3배 확대되어야 함. 미국은 한국 태양광 기업들의 주력 시장으로 매출 확대 등의 긍정적 영향이 예상

■ 바이든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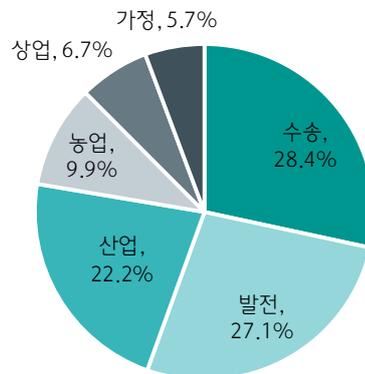
- 바이든 당선자의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차별화 되는 부문으로 취임 즉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복귀할 예정
- 바이든은 2050년까지 미국의 넷 제로⁵⁾ 달성을 위해 광범위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예정인데,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분야 중 하나가 전력임
- 전력은 수송과 함께 미국 온실가스 최대 배출처로 바이든은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을 완전히 탈탄소화(carbon pollution-free power)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고, 차세대 송배전 전력망을 건설하며, 배터리 저장, 수소 등과 같은 클린 에너지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

표13 |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바이든의 주요 공약

분야	내용
기후변화 대응	-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수반한 100% 클린에너지 경제 달성 - 기후변화 대응 중심의 인프라 투자
전력	-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탈탄소화 - 클린에너지 적용 확대 위한 송배전망 투자
재생에너지	- 태양광 지붕 800만개 포함 5억개의 태양광 패널 설치 및 미국산 풍력 터빈 6만개 설치
R&D	- 배터리 저장, 재생 수소, 원자력, 네거티브 배출 등 클린에너지 기술개발에 4,000억 달러 지원

자료 : Joe Biden.com

그림21 | 미국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2018년)



주 : 온실가스는 CO₂, CH₄, N₂O, F-gases 등을 포함
자료 : EPA

5) 넷 제로(Net-Zero):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해 순 배출량이 0인 상태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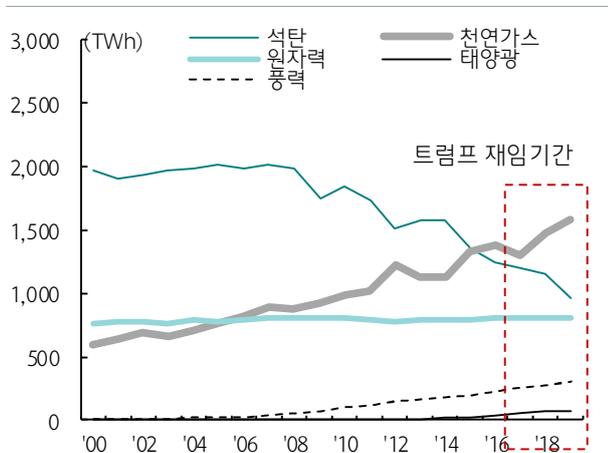
■ **현재 미국 최대 발전원은 천연가스이며, 석탄은 경쟁력 상실로 쇠퇴중이고, 태양광·풍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석탄 발전은 2014년까지 미국 내 최대 발전원이었으나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가스발전의 가격 경쟁력 상승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최근 수년간 영향력이 크게 하락
 -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석탄산업 부흥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발전량 중 석탄 비중은 2016년 30%, 2019년 23%, 2020년 1~8월 19%로 빠르게 감소
- 2019년 말 계획된 석탄발전의 순 폐쇄 용량(2020년-2024년)은 28GW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여 천연가스, 태양광 및 풍력발전 건설이 늘어날 예정
 - 2020-2024년 기간 중 천연가스는 28GW, 태양광 39GW, 풍력 37GW의 순증설이 계획

■ **탈탄소화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태양광·풍력·ESS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천연가스는 일정 비중이 유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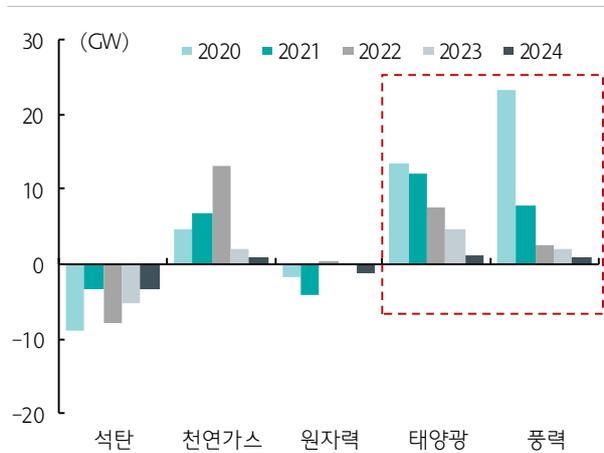
-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美 유틸리티급 발전설비 1,100GW 중 약 740GW의 석탄·석유·천연가스 설비를 재생에너지 및 ESS 등으로 대체해야 함
-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의 변동성 및 기술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완전한 대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주요 유틸리티들은 이를 감안하여 대응 계획 마련 중
- Dominion Energy는 '20년 사업계획에서 향후 15년간 태양광 16GW, 해상풍력 5.1GW, ESS 2.7GW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보다 약 4배 상향된 수준. 또한 3.6GW 신규 가스발전 건설 계획은 철회했지만 계통 안정성을 위해 최소 970MW는 필요하다고 언급
- Duke Energy는 '30년까지 최소 50% 이상 탄소 감축을 목표로 발전 계획(6개 시나리오)을 수립했는데, 석탄 폐기 및 재생에너지 설치 가속화와 함께 천연가스의 중요성 강조

그림22 | 미국의 주요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



자료 : EIA

그림23 | 미국의 2020-2024년 발전소 용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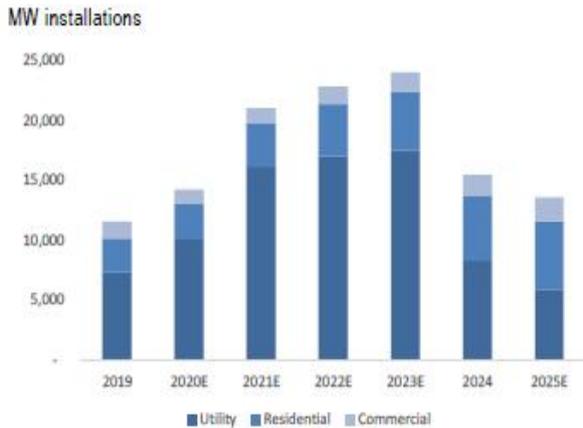


주 : 2019년 말 계획 기준이며, 설치에서 폐쇄를 제거한 순증 용량
자료 : EIA

■ 미국은 한국 태양광 기업들의 주력 시장으로 매출 확대 등의 긍정적 영향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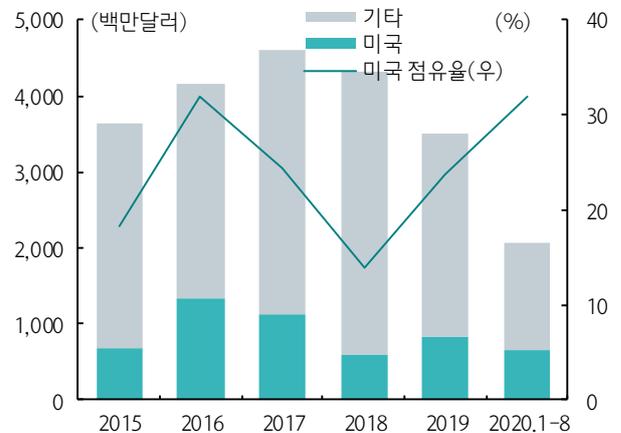
- 코로나19에도 미국 내 태양광 설치는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14.2GW가 설치될 전망(BNEF 기준)
- 2020년 1~8월 한국 태양광 제품의 세계 수출액은 20.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했으나, 미국向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한 6.5억 달러를 기록하며 호조
 - 미국 태양광 제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이 '19년 9.2%에서 '20년 1~8월 10.5%로 상승
- 현재 미국의 연간 태양광 지붕 설치량은 50만개 수준으로 바이든의 공약(5년간 800만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설치규모를 2~3배 확대해야 함
- 한화솔루션과 LG전자 등은 미국 주택용/상업용 부문에서 우수한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신성이엔지, 현대에너지솔루션 등도 미국 수출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 등의 긍정적 영향이 예상
- 바이든은 미국 내 제품 생산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화솔루션과 LG전자는 현지 모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그림24 | 미국의 태양광 발전 전망



자료 : BNEF(2020.10), JP모건 재인용

그림25 | 한국의 태양광 제품의 수출 동향



주 : HS코드 854140 기준
자료 : Trademap

표14 | 국내 태양광 기업의 미국 시장 동향

기업	내용
한화솔루션	미국 조지아주에 1.7GW 모듈 생산라인 구축(2019.9) 2020년 상반기 미국 주택용 태양광 M/S 22%로 1위, 상업용 태양광 M/S 21%로 1위
LG전자	미국 앨라배마주 헨츠빌에 500MW 태양광 모듈 라인 구축, 2019년 생산 시작 2020년 상반기 미국 주택용 태양광 M/S 13%로 2위, 상업용 태양광 M/S 10% 기록

자료 : 언론보도

F. 건설업 : 해외 수주 스마트시티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 **Summary** : 바이든 당선으로 공급감소 등으로 유가 상승 가능성은 높으나 수요 역시 감소할 예정이어서 가격 급등의 가능성은 낮음. 우리나라는 석유에 기반한 산업설비 수주가 해외 수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바이든의 당선은 해외 수주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중동 산유국이 산업구조를 재편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건축, 토목 등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은 호재임

※ **Comment** :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스마트시티 등을 해외 수주 신성장 동력을 삼기 위해 민간 및 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음

■ 바이든 당선으로 유가 상승 가능성은 높으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 바이든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 내 에너지 기반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기조로 하고 있어 석유 등 탄소에너지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억제될 것으로 전망
- 단, 에너지 전환은 중장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전환 기간 중 에너지 자립유지를 위해 미국 내 원유 생산을 급격하게 억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
 - 2035년 전력부문 탄소배출 제로, 2050년 100% 청정 에너지 전환 달성이 목표
 - 공급 감소 요인으로 지목되는 Fracking Ban(셰일시추 금지)는 '신규' 유정에 한해 적용
- 미국의 대 이란 관계 개선, 중장기 원유 수요 감소 전망에 대응한 중동지역의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자금 마련 등으로 글로벌 원유 공급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은 낮음
- 코로나 팬데믹 종식에 따른 수요 회복, 미국 내 원유 생산 등에 따른 규제 강화 등으로 원유 가격 상승 가능성은 높으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26 | 국제 유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표15 | 바이든 당선자 에너지 관련 정책

이슈	정책 내용
기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협정 재가입 ○ 미국 중심의 국제공조 강화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까지 100% 청정 에너지 전환 ○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배출 제로 ○ 청정에너지 R&D 대규모 투자
에너지 자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자립 기반은 유지 ○ 신규 Fracking Ban ○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로 수요 억제

자료: 한전경영연구소, 언론기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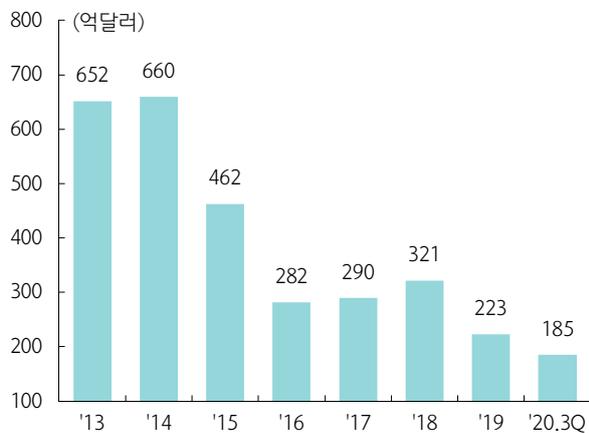
■ **유가 회복되더라도 균형재정 수준을 밑돌아 해외 건설 수주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할 전망**

-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중동지역의 건설수주가 급감, 해외 수주 실적도 크게 감소
 - 해외 수주 지역별 비중('10~'19년) : 중동 47%, 아시아 35%, 기타 18%
- 유가와 해외 건설 수주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국제유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해외 수주의 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균형재정유가(usd/bbl) : 사우디 75, UAE 69, 쿠웨이트 61, 이라크 60
- 중동지역의 건설 발주는 투자개발형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국내 건설업계의 프로젝트 관리역량은 아직 미진한 상황

■ **중동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를 위한 노력은 해외 수주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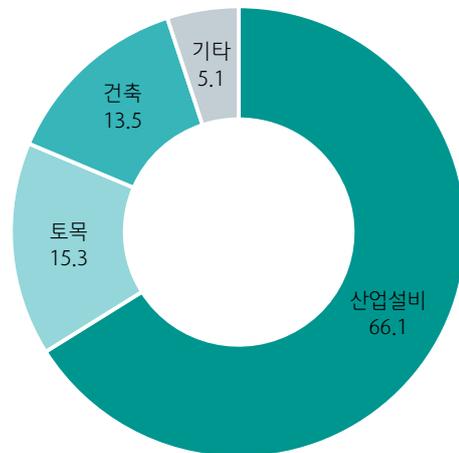
- 중장기적인 친환경에너지 수요 증대에 대응해 중동 각국 역시 탄소 에너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사우디 국가변혁프로그램 2020 - 비전 2030, 이라크 SDS 2030 등이 대표적
- 대부분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존 간 균형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정세불안 예방, 재정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식경제, 친환경 에너지, 관광산업 등을 주요 전략 산업으로 선정
- 전반적으로 석유 수요를 전제로 한 산업설비의 수주 비중은 저하될 것이나 도시 개발(건축), 인프라 건설(토목) 등의 수주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27 | 해외 건설 수주 실적



주 : '20.3Q는 3분기까지 누적 수주액
자료: 해외건설협회

그림28 | 공종별 해외 건설 수주 비중



주 : 2010~2019년 수주 총액 기준
자료: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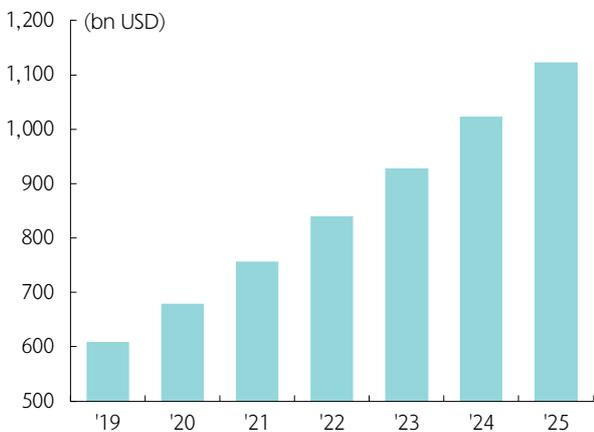
■ 스마트시티 시장 확대는 해외 수주의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

- 정보화 진전 등으로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중동 및 아시아 개도국에 수주기회 확대가 기대됨
 -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십억불) : 679.5('20년) → 928.4('23년) → 1,123.4('25년)
- 우리나라는 세계최초로 스마트시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U-City'를 주창하는 등 스마트시티 관련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수주 잠재력은 풍부함
- 우리나라는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해외 수주 등에 활용할 계획에 있음
 - 국토부는 지난 10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OTRA 등과 협력하여 태국(방콕), 베트남(하노이) 등 4개국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설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

■ 선진 각국도 스마트시티 육성 정책을 시행 중으로 경쟁은 치열할 전망

- 선진 각국도 도시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노하우의 수출 역시 고려 중에 있음
 - 스마트시티는 도시문제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결하는 도시를 의미함
- 미국 등 선진국은 민간 기업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해외 건설 수주 측면에서는 다소 유리한 입장에 있음
- 단, 해외 수주는 건설 역량 외에도 금융 및 국가적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민간의 수주전략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그림29 |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



자료: statista

표16 | 세계 각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구분	주요 내용
유럽	○ 스마트시티 및 혁신 파트너십 계획 ○ 등대도시 - 후속도시 개발 전략 채용
미국	○ 스마트시티 계획(2015) 수립 ○ Global City Team Challenge 도입
중국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스마트시티 포함 ○ 500개 도시 건설 목표
인도	○ 스마트시티 미션 프로그램(2015) ○ 98개 도시 건설 목표
싱가포르	○ 스마트네이션 국가 프로젝트
일본	○ 신성장전략 2010~2020 계획 수립

자료: 이재용 외(2018)

J. 정보서비스 : 디지털 플랫폼, 바이든 당선에 따른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이 상존

※ **Summary** : 바이든 당선으로 디지털 플랫폼에는 면책 조항 폐지, 프라이버시 관리 강화, 법인세 인상 등의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며, 특히 민주당에서 집중해온 반독점법 강화는 기업 분리, 인수합병 제한 등의 강력한 규제를 포함. 반면, 긍정적 요인으로 포용적 이민정책, 미중 갈등 완화, 망중립성 회복 등이 거론됨. 중국과의 관계, 행정부 인적 구성 등에 따라 실제 시행 여부와 강도는 아직 미지수

※ **Comment** : 법인세 인상에 따른 순이익 감소가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독점법 강화가 실행된다면 미국 및 한국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면책 조항 폐지, 프라이버시 관리 강화, 세율 인상 등은 디지털 플랫폼의 부정적 요인

- 바이든의 프라이버시 및 디지털 정보에 대한 책임 강조와 IT 기업에 불리한 법인세 인상 방안 등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디지털 플랫폼 상의 정보 관리에 있어 일종의 면책 조항이었던 통신품위법(CDA) 203조를 폐지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여 보다 높은 책임감을 부과할 계획
 - 통신품위법 203조 : 플랫폼 상 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면해주는 조항으로 트럼프는 반 보수주의 정보 양산, 바이든은 허위정보 유포를 이유로 폐지를 공약
- 법인세 인상안 중 해외 수익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최저 세율 15% 신설 등은 해외 비중이 높고 세금 환급 혜택이 큰 대형 플랫폼 업체의 세부담을 증가시킴
 - S&P500 기업의 미국 내 매출은 60.3%지만 IT 기업은 43.5%로 해외 비중이 높음
 - IT 기업은 법인세 납부 후 일자리 창출 등을 명목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최저 세율 신설 후에는 환급 후 실효세율이 15%로 제한되어 세율 인상의 효과 존재

표17 | 바이든 당선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의 부정적 요인

구분	내용
면책 조항 폐지	- 일종의 면책 조항인 통신품위법 203조 폐지로 플랫폼의 정보 관리 책임 강화
프라이버시	- 개인 프라이버시 표준 마련을 요구
법인세 인상	- 최저 세율을 신설하고, 해외 수익에 대한 세율 인상

자료 : 언론자료

표18 | 바이든의 법인세 인상과 IT 기업 영향

구분	내용
최고 세율	- 최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인상
최저 세율	- 기업 최저세금 신설(세율 15%) - 세금 환급 축소로 실효 세율 상승
해외 수익	-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을 10.5%에서 21.0%로 인상 - 해외 비중이 높은 IT 기업에 영향이 큼

자료 : 언론자료 취합

■ 미 하원 보고서 권고안이 채택된다면 기업 분리, 인수합병 제한 등의 반독점 규제 강화

- 지난 10월 미 하원 반독점위원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거대 플랫폼의 구조적 분리와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 점유율 상승 제한 등의 반독점 규제 강화 보고서를 발표
 - 반독점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권고 사항 :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과 같은 유사한 사업 분야의 구조적 분리, 인수합병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음을 기업이 입증
- 당 보고서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을 독과점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참여자에 대한 지위 남용, 플랫폼 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음
 - 참여자에 대한 지위 남용 사례 : 플랫폼이 직접 시장에 참여(예 : 아마존의 직접 판매)하면서 플랫폼 참여자(예 : 아마존 입점 상품)에 대한 정보 접근 제한, 모방 상품 출시 등
- 바이든 역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한 바 있어, 당 보고서 내용이 채택된다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기업 구조, 인수합병 전략을 크게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기업 분리에 대해서 바이든은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을 뿐 직접적인 표현은 회피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규제 강도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음

■ 반면 포용적 이민 정책, 중국과의 갈등 완화, 망중립성 회복 등은 긍정적 요인

- 이민 정책에 있어서 바이든은 고속권 전문직 비자발급 완화를 비롯해 트럼프 대비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IT 업계의 인재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H-1B(전문직 취업비자) 프로그램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 명령에 따라 미국 노동부와 국토안보부는 10월 초 취업비자 발급 프로그램 개편 계획 발표
- 중국과의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 기술 분쟁 여파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던 중국 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상승하는 점도 긍정적

표19 | 미 하원 보고서에서 규정한 독과점 기업

기업	내용
구글	- 미국 검색 시장의 90% 차지 - 검색 및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
페이스북	- SNS 점유율 70% 차지 -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로 SNS 시장 독점
아마존	- 미국 온라인 소매 75% 차지 - 온라인 소매 시장의 독점적 지위로 입점 판매자에게 횡포
애플	- 세계 스마트폰의 26%가 애플 앱마켓 - 앱마켓 내 지배력 남용하여 타사 서비스 배제

자료 : 미국 하원, 한국은행, 조선일보

표20 | 바이든 당선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의 긍정적 요인

구분	내용
이민 정책	- 포용적 이민 정책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 개편 - 인재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
중국 사업	- 중국과의 갈등 완화로 중국 내 미국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예측 가능성 상승
망중립성	- 트럼프 당시 폐기되었던 망중립성 회복 - CP 차별 금지로 보다 자유로운 경영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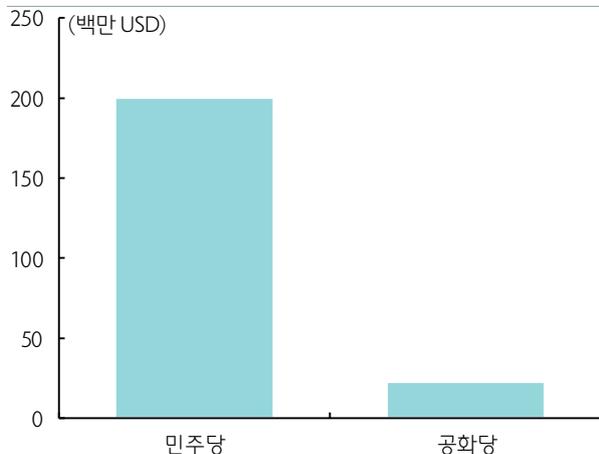
자료 : 언론자료 취합

- 트럼프 행정부 당시 폐기되었던 망중립성이 회복되면서 플랫폼을 포함한 CP에 보다 자유로운 경영 환경이 주어지면서 서비스 개발 및 생태계 조성에 유리하게 작용
 - 망중립성 :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콘텐츠제공자(CP)에 대한 인터넷 접속 차별을 금지하는 개념으로 트럼프 대통령 시기 FCC(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폐기

■ **세금 인상, 취업 비자를 제외하면 시행 여부 및 강도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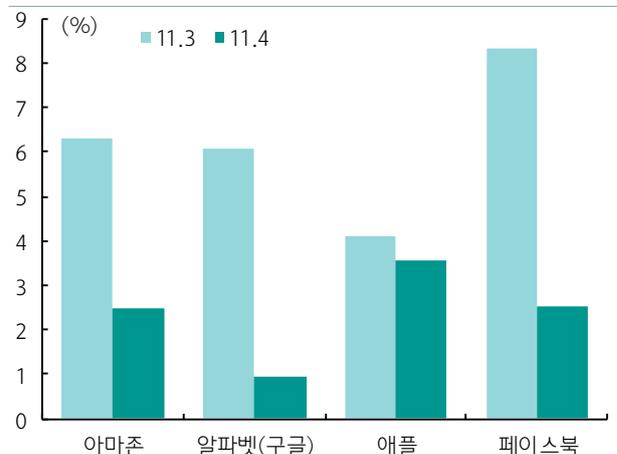
- 직접적으로 인상 의견을 밝힌 법인세와 시행 절차가 비교적 간편한 취업 비자 개편은 시행 가능성이 높으나, 그 외 정책들의 시행 여부 및 강도는 아직 미지수
 - 법인세 인상은 우선순위 공약 중 하나로 취임 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H-1B 취업 비자의 경우 행정 명령만으로 수정 가능하여 취임 직후 변경이 기대됨
- 플랫폼 독과점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긴 했으나 중국 플랫폼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국 경쟁력을 상실할 정도의 강한 정책을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
- 바이든 행정부의 인적 구성 또한 온건파와 강경파가 혼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당 지지 기반인 실리콘 벨리에 플랫폼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
 - 재무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기업 분리 등을 주장해온 강경파이나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는 실리콘 벨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지역구 출신의 온건파
- 여러 변수가 혼재된 상황에서 관련 기업 및 주식 시장에서는 바이든 당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적극적 선거 지원 및 주가 상승이 나타남
 - 실리콘벨리의 선거 후원금 : 민주당 1억 9,900만달러, 공화당 2,200만달러
 - 선거 당일 및 다음날(11월 3~4일), 주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

그림30 | 실리콘벨리의 선거 후원금



자료 : VOX, 중앙일보

그림31 | 선거 직후 디지털 플랫폼의 전일대비 주가 상승률



자료 : 나스닥(종가 기준)

■ **법인세 인상에 따른 순이익 감소가 가장 실질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며, 실현 가능성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플랫폼 반독점 규제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세계적 추세로 확산될 수 있음**

- 시행 가능성과 효과를 감안하면 법인세 인상에 따른 순이익 감소가 디지털 플랫폼 업체 실적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BOA에 따르면 높은 해외 매출, 세금 환급 제한 등으로 IT 기업은 순이익 10% 감소 영향
-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 또한 과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상원 의원 선거, 공화당의 정책 기조, 재무 장관 임명 등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음
 - 내년 1월 결산 투표에서 민주당이 상원의원 과반을 확보할 경우 규제가 강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공화당의 협조 정도에 따라 규제 강도와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 강경파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재무장관 임명 여부도 변수로 작용
- 만약 기존 EU에 이어 미국까지 독과점 규제 강화에 동참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정책 기조가 세계적 추세로 확산되면서 관련 기업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 기존에는 MS, 구글 등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제소, 조사, 처분이 주로 EU에서 행해졌음

■ **국내에서는 세계적 반독점 규제 강화 및 미국 플랫폼 수수료 변화 등에 따른 영향 존재**

- 최근 플랫폼 반독점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 강화가 가속화될 수 있으며, 미국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 변화에도 영향 받을 수 있음
 - 공정위는 지난해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전담팀을 출범하고 정보 독점, 수수료 등을 심사
- 반독점 규제 강화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내 관련 규제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국내 독과점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 등의 비즈니스 모델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안드로이드, iOS 등 독과점 플랫폼이 국내 기업에 부과하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조세 부담 전가에 따른 인상 요인과 반독점법 강화에 따른 인하 요인이 공존 

표21 |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국내외 이슈

국내외	구분	내용
해외	MS-슬랙 분쟁	- 사무용 SW 시장에서 막대한 지배력을 보유한 MS 오피스는 협업툴 '팀즈'를 무료 제공 - 경쟁사 '슬랙'이 '끼워팔기 행위'로 EU에 신고
	구글 과징금	- EU는 2017~2019년 동안 검색, OS, 광고 분야의 불공정 경쟁으로 과징금(총 82.5억 유로) 부과
	아마존 부당행위	- EU는 아마존의 외부 판매자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유사한 PB 상품 출시 등)에 대해 조사
국내	공정위 전담팀 신설	- 공정위는 지난해 플랫폼 독과점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ICT 조사 전담팀 출범 - 부동산(네이버)에 이어 쇼핑, 동영상 관련 심사
	네이버의 정보 독점	- 공정위는 부동산 정보 관련, 네이버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에 대해 과징금(10억원) 부과
	구글의 수수료 부과	-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 대상 확대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에 부정적 영향 예상 - 공정위는 이에 대한 영향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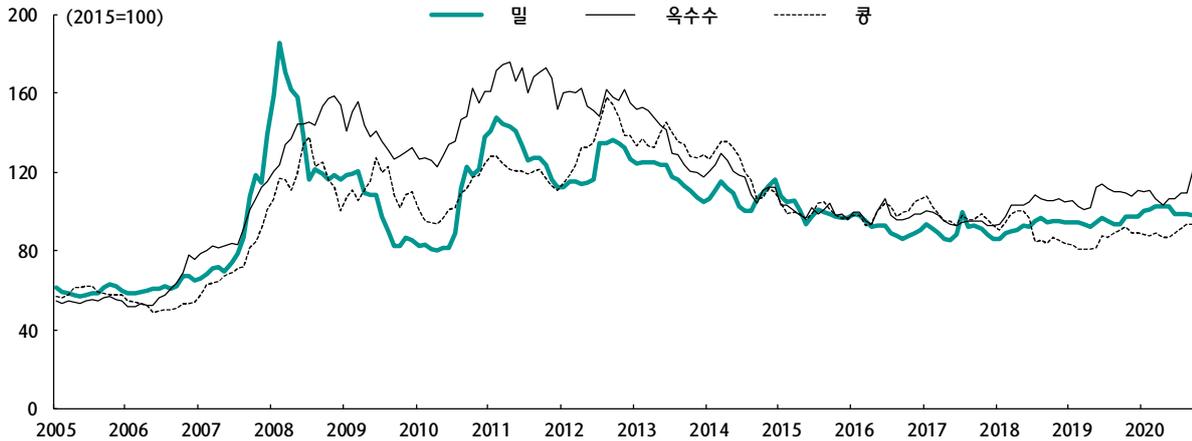
자료 : 언론자료 취합

업종별 주요 지표

음식료(C1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32 | 국내 곡물 수입가격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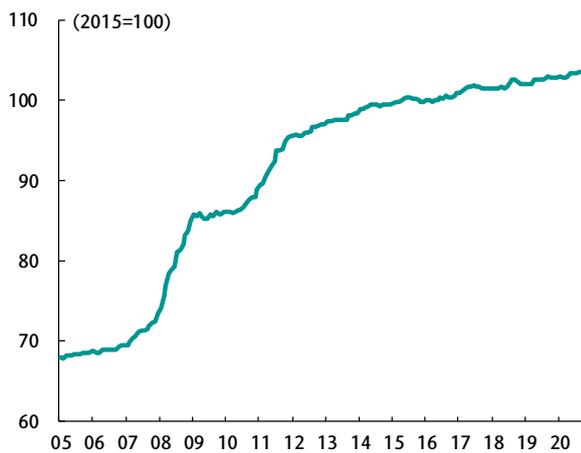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코로나19 및 기후변화로 곡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옥수수 가격이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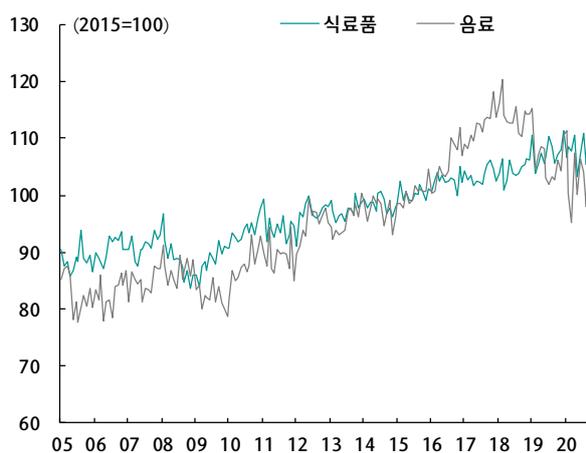
- 최근 몇 년간 국제 곡물가격은 기후 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 소비량 제한에 따른 수급 안정 등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지속해 왔으나, 2019년 말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 중
- 2020년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및 물류 시스템 불안으로 곡물가격 점진적으로 상승 중이며, 특히 하반기 이후 중국 수입량 확대 및 브라질 남부 작황 부진 우려로 옥수수 가격이 크게 상승

그림33 | 음식료품 제품가격 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34 | 음식료품 출하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경기 부진으로 음식료품의 가격 인상은 제한적**

- 최근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식료품 가격 상승이 저조했고, 하반기에도 경기부진 지속되면서 가격 인상이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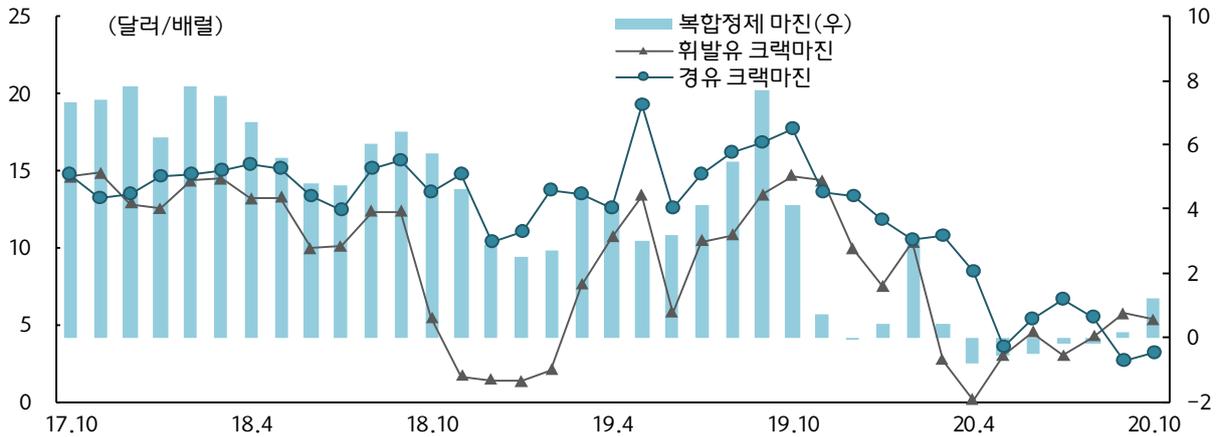
■ **음식료품 출하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며 혼조세**

-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급락한 식료품과 음료 출하지수가 6월 상승 전환했고, 8월 재하락 후 9월 다시 상승하며 혼조세

정유(C19)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35 | 정제마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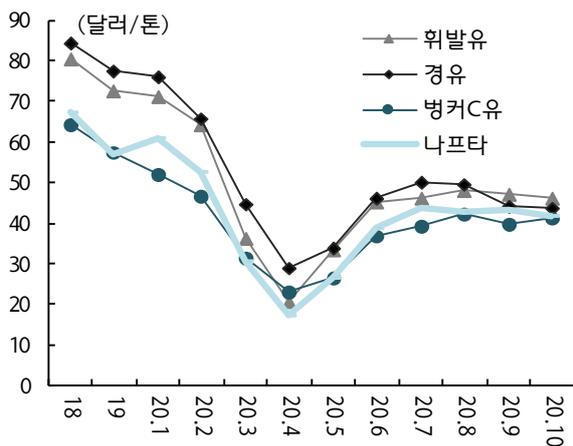


자료: 페트로넷

■ 최근 경기회복 기대와 석유제품의 수요개선으로 정제마진 (+) 전환

- 하반기 글로벌 봉쇄조치 완화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회복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재고 감소, 이에 따라 복합정제마진은 10월 (+)로 전환

그림36 | 석유제품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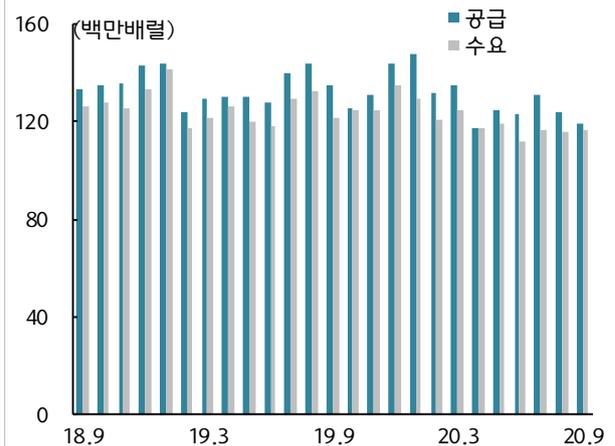


자료: 페트로넷

■ 재고 감소로 가격은 소폭 상승했으나 폭은 제한적

- 10월 재고 감소,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 상승으로 가격은 소폭 상승
- 다만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안심리 확대, 중국 밀어내기 석유제품 수출 움직임으로 가격 상승 제한

그림37 | 국내 석유정제품 수급 추이



자료: 페트로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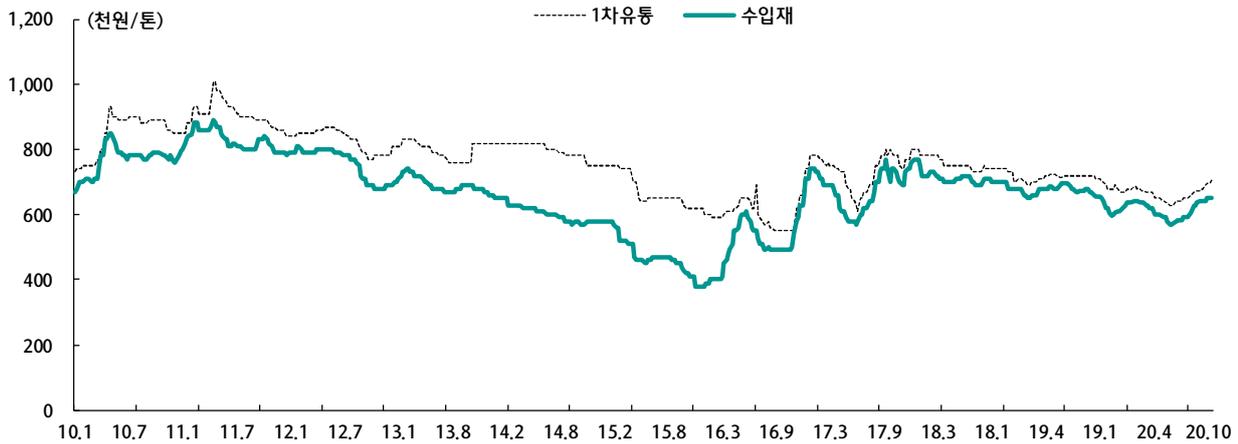
■ 정유사의 기동률 조정, 석유제품 수요 회복으로 공급과잉 다소 완화

- '20년 10월 누계 석유제품 공급은 전년동기비 10% 축소 되면서 공급과잉은 다소 완화

철강(C24)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38 | 국내 철강(고로 열연)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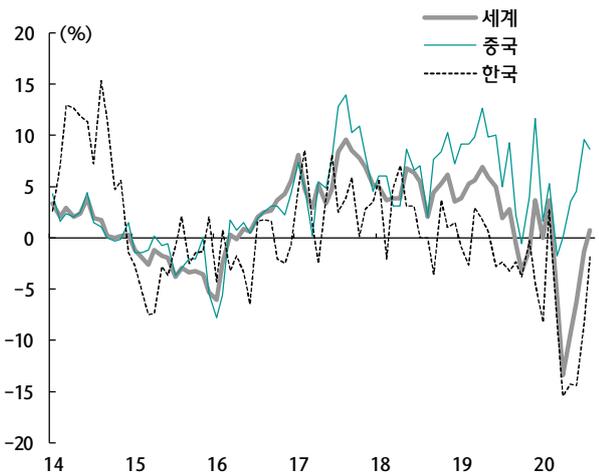


자료: 한국철강신문

■ 중국 유통가격이 회복 중이며, 10월 국내 철강사도 cost push로 제품(열연)가격 인상을 발표

- 최근 몇 년간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산업경기 둔화로 약세를 지속해 온 국제 철강가격이 2020년 초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급락하였고, 5월 이후 재반등하여 점진적으로 상승 중
- 중국 유통가격은 동절기 감소에 대한 기대감과 재고 감소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의 경우 고로사(POSCO현대제철)가 원가 부담을 이유로 10월 이후 출하되는 제품의 가격 인상(톤당 5만원)을 발표

그림39 | 주요국 조강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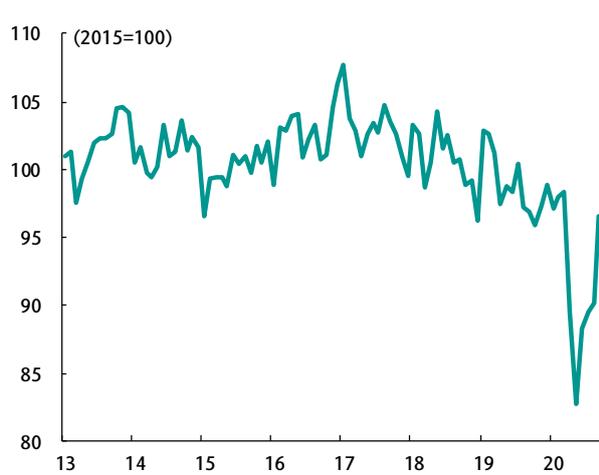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

■ 2020년 9월 누계 전 세계 조강생산 3.2%(YOY) 감소

-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 등으로 산업활동이 재개되면서 7~9월 조강생산량이 증가 추세이나 9월 누계 기준(YOY)으로는 감소

그림40 | 국내 1차 금속 출하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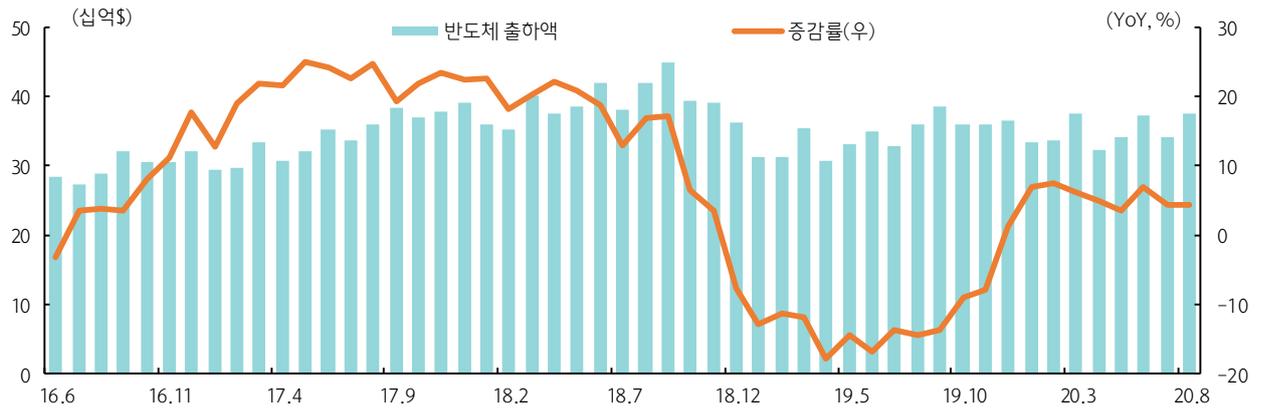
■ 6월 반등한 금속 출하지수는 점진적으로 상승 중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5월 급락한 국내 금속 출하지수가 6월 반등에 성공하였고, 9월까지 회복 추세

전 세계 반도체(C26)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41 | 전 세계 반도체 출하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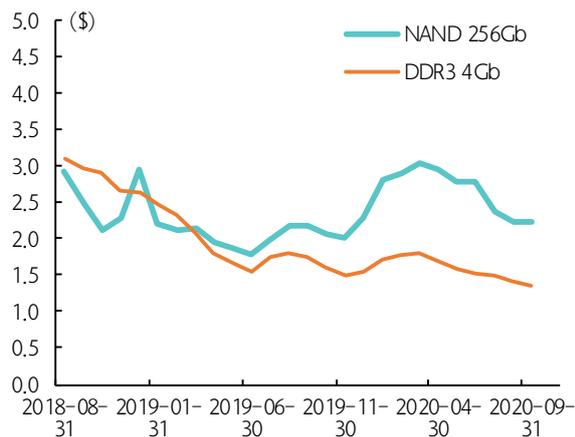


자료: WSTS

■ 북미 성장세에 힘입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8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달성

- 8월 전 세계 반도체 출하는 375억 달러로 전월과 동일한 4.4%(YoY) 증가를 보이며 8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달성
- 세계 반도체 출하 증가율(YoY): +3.4%(‘20.05) → +7.0%(‘20.06) → +4.4%(‘20.07) → +4.4%(‘20.08)
- 8월 지역별 출하 증가율(YoY): 북미 + 18.8%, 유럽 - 7.8%, 일본 -2.9%, 아시아 + 4.4%

그림42 | 메모리 가격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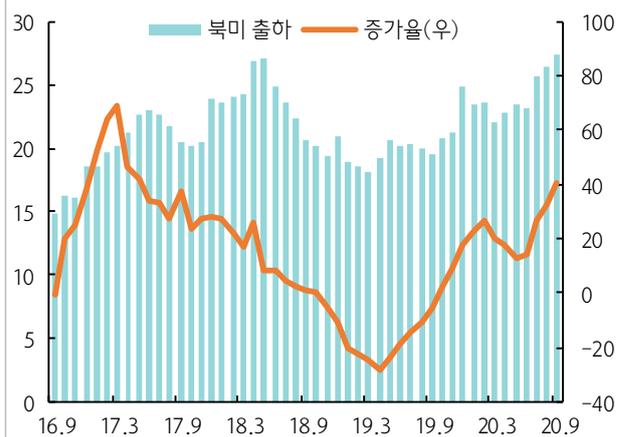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 현물가격 하락세 전환, 고정가격 하락 지속

- PC DDR4 4Gb, NAND 256Gb 동시 하락(현물)
- PC DDR4 4GB, 모바일 DDR3 16Gb 포함 (고정)
- MLC NAND 64Gb, 모바일 DDR4 8Gb, 서버 연속 하락 (고정)

그림43 |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



자료: SE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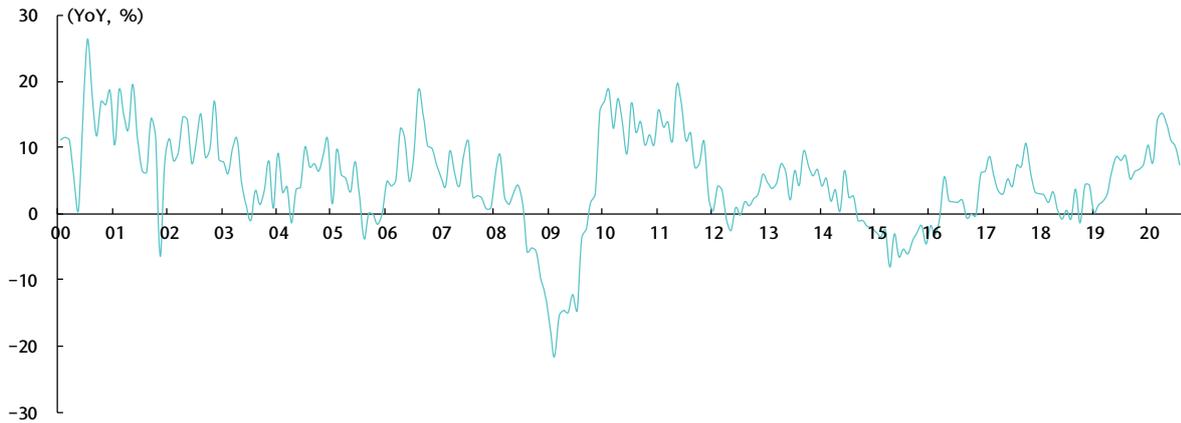
■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 증가율, 高 상승세 지속

- 9월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 크게 상승(40.3%, YoY)
- 북미 장비 출하는 반도체 시장을 6개월 정도 선형
- ‘17년 5월 이래 최고 증가율을 보이며 내년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이어나감

자동차(C3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44 | 국내 완성차 수출단가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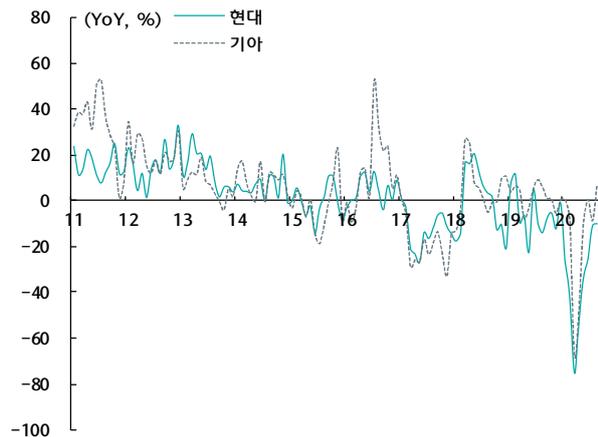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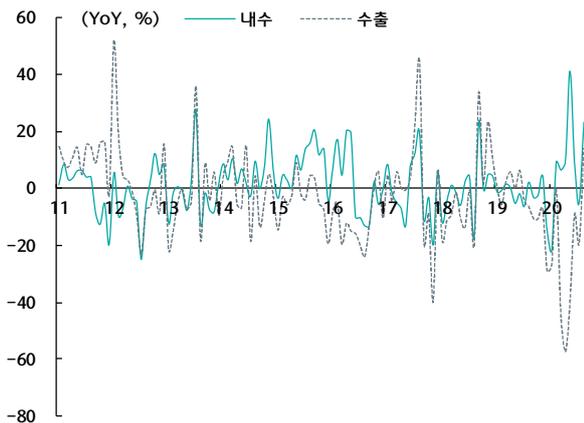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9월 수출 단가는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SUV와 대형세단의 수출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

- 9월 수출 단가는 대당 1만 7,790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수출 단가도 상승하면서 수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1%로 크게 증가

그림45 | 국내 내수/수출 판매 증감률 추이

(YoY, %) 그림46 | 현대/기아차 해외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9월 내수와 수출 모두 양호

- '20년 9월 내수는 세제혜택 축소,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전년 9월 대비 영업일수 2일 증가, 신차 출시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
- '20년 9월 수출은 해외 일부 지역의 락다운 해제 및 경제 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자동차 경기가 개선되면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9월 해외생산은 마이너스(-) 성장 지속

- '20년 9월 현대/기아 해외생산은 32.7만 여대로 전월 대비 11.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2% 감소
- 같은 기간 현대/기아 해외생산은 '18년 9월 대비로도 12.0% 감소하는 등 전전년 동기 대비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에너지(D)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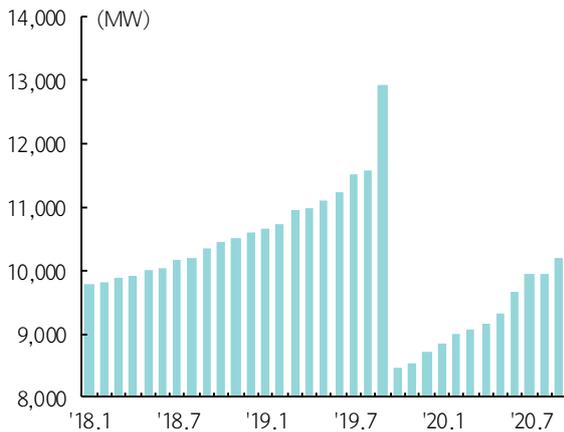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47 |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전력거래소 등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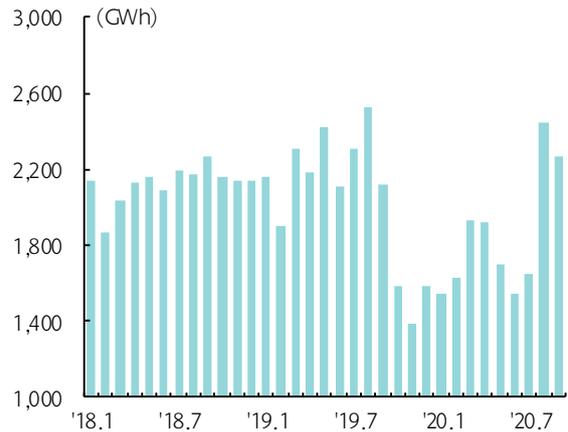


주 : 2019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온 재생에너지에서 제외
자료: 전력거래소

■ 바이오, 태양광 등 여러 분야에서 설비 증가

-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189MW 기록
- 전월대비 바이오 105MMW, 태양광 55MMW, 풍력 43MMW, 연료전지 41MMW 등 증가

그림48 |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전력거래소 등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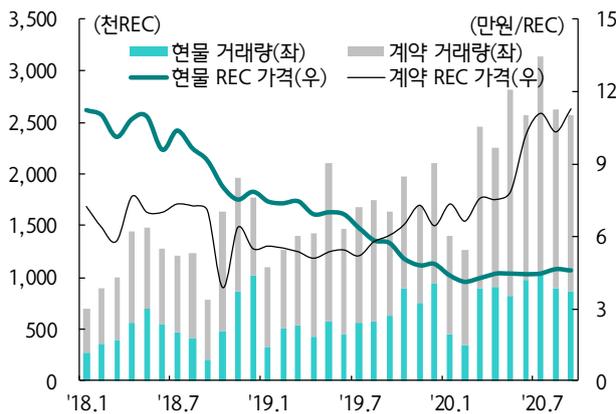


주 : 2019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온 재생에너지에서 제외
자료: 전력거래소

■ 9월 신재생 전력거래량 전월대비 감소

-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 2,269GWh로 전월대비 7.1% 감소, 전년동월대비 7.2% 증가

그림49 | 평균 REC 거래가격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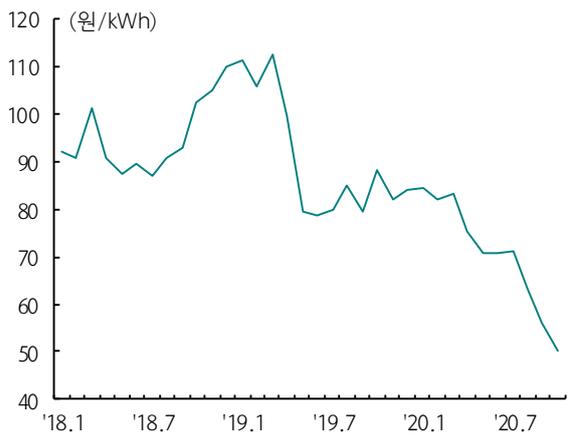


주 : 거래량 및 금액으로부터 계산한 평균 REC 거래가격으로 실제 계약가격 및 현물가격과 차이 존재
자료: 전력거래소

■ REC 현물 가격 4만원대 중반에서 하향 안정화

- 2020년 9월 평균 계약 REC 11.3만원으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 현물 REC 4.6만원으로 전월수준 유지

그림50 | 계통한계가격(SMP) 동향



자료: 전력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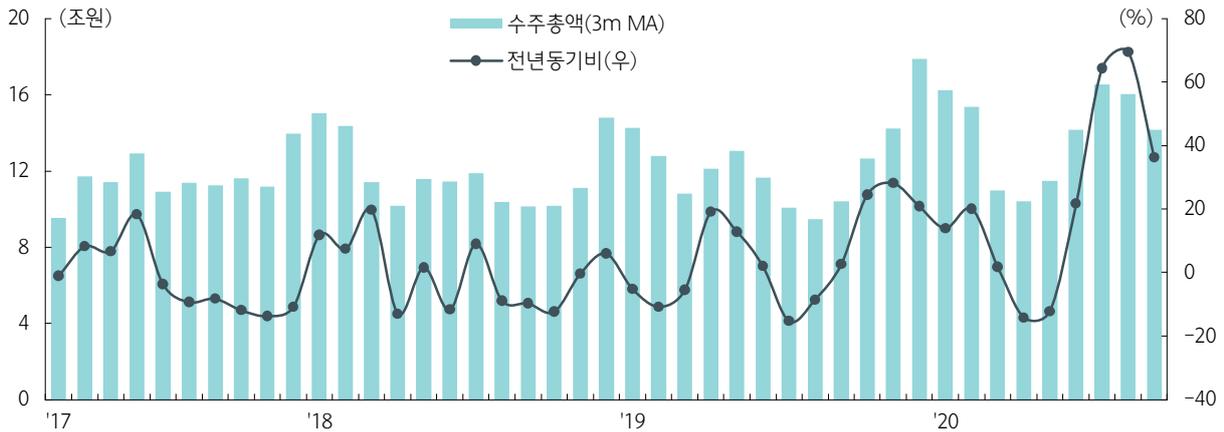
■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SMP 약세 기조 지속

- 2020년 10월 SMP는 전년동월대비 42.9% 하락한 50.39 원/kWh 기록

건설업(F)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51 | 건설사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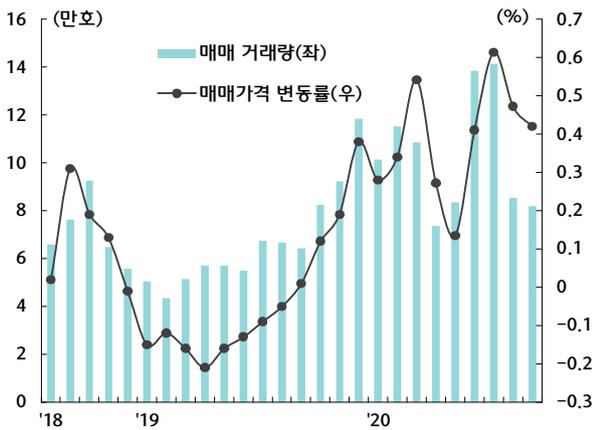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주택 수주 확대에 힘입어 국내 수주 큰 폭으로 확대

- 지방 미분양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지방 주택 경기가 개선되면서 주택 수주가 전반적으로 큰 폭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대비 40% 이상 성장했음
- 민간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로 기계설치(플랜트) 부분의 수주가 증가해 민간부문은 건축 및 토목 모두 수주가 개선되었으나 공공부문의 수주는 전년동기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부진했음

그림52 | 주택 매매가격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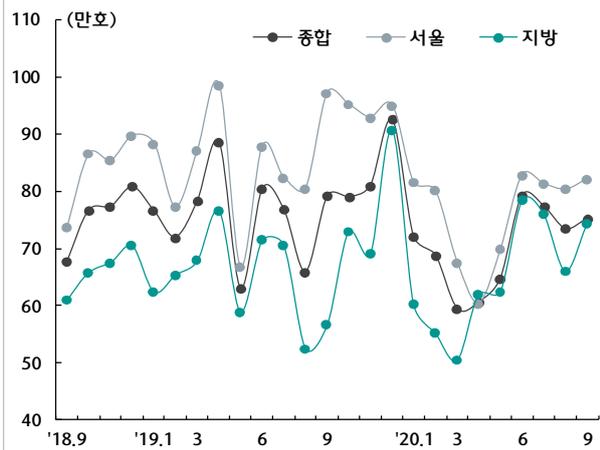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 가격 급등세는 진정 되었으나 상승세는 여전

- 수도권 가격 급등에 대응한 정부의 수요 억제 및 공급 확대 정책으로 가격 급등세는 7월 이후 다소 진정
- 단, 주임법 개정에 따른 전세가격 급등으로 임차수요의 매매전환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중

그림53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기업 체감경기는 회복세

- 코로나19 영향이 빠르게 감소한 6월 이후 건설기업의 체감경기 역시 회복세가 이어지는 중
-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의 회복세 역시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 건설업체의 실적회복이 기대됨

유통(G)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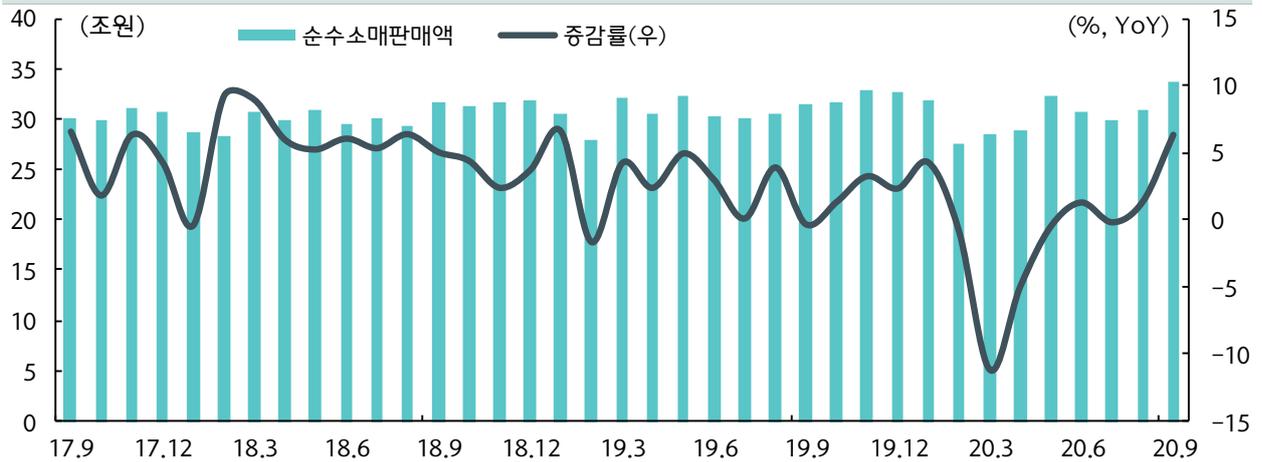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54 | 순수소매판매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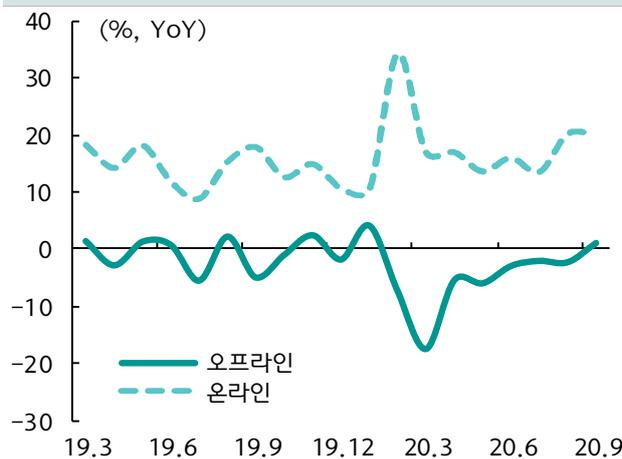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코로나19 재확산 및 거리두기로 정체되었던 소매판매액은 명절효과로 9월에 회복

- 순수소매판매액(자동차 및 연료 판매액 제외)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거리두기 시행으로 7,8월 각각 -0.2%, 1.4%의 낮은 전년대비 성장률을 보였으나 9월에는 전년(9.13) 대비 늦어진 명절(10.1)로 선물 구매가 집중되면서 6.3% 성장

그림55 | 주요 오프라인 업체들의 매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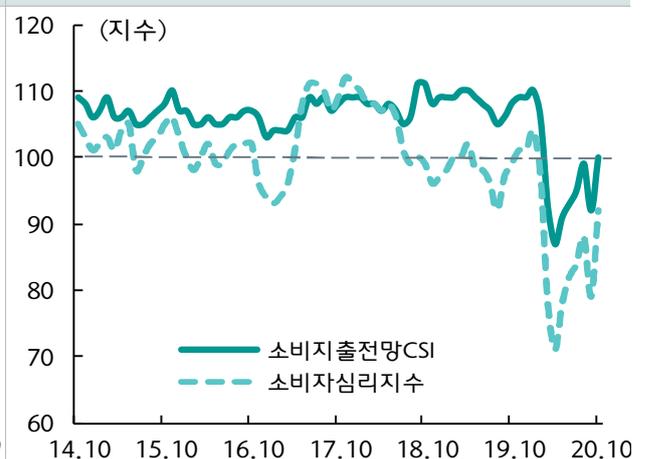
주: 오프라인-편의점(3사), SSM(4사), 백화점(3사), 대형마트(3사)
온라인-온라인판매중개(4사), 온라인판매(9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9월, 오프라인 모두 성장세 기록

- 9월, 오프라인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하에서도 명절 특수 소비가 집중되면서 전년대비 1.0% 매출 성장
- 비대면 소비 확대 및 실내 활동 증가가 지속되면서 온라인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YoY 20.0% 성장 기록

그림56 | 소비 심리 지수, 소비 지출 전망



자료: 통계청

■ 소비심리는 거리두기 완화로 회복

- 9월 코로나 재확산과 긴 장마로 소비심리지수, 소비지출 전망 CSI는 각각 92.79로 침체
- 10월에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지출전망 CSI가 각각 92, 100으로 회복

하나 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